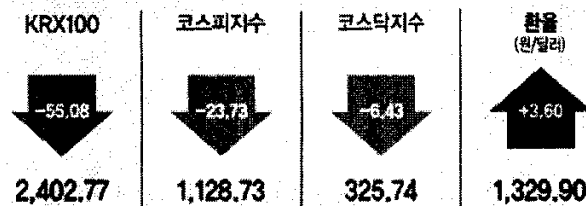


# NEWS SUMMARY

2008.11.12

자산운용협회 홍보실



## • 유가증권

| 투자자별 매매동향 |         |         |        | 단위: 억원 |
|-----------|---------|---------|--------|--------|
| 구분        | 매도액     | 매수액     | 순매수액   |        |
| 기관        | 9879.5  | 11368.8 | 1489.3 |        |
| 외국인       | 9534.7  | 8548.3  | -986.4 |        |
| 개인        | 37580.9 | 37232.7 | -348.3 |        |
| 기타        | 1247.9  | 1082.9  | -165.0 |        |

## • 코스닥

| 투자자별 매매동향 |        |        |        | 단위: 억원 |
|-----------|--------|--------|--------|--------|
| 구분        | 매도액    | 매수액    | 순매수액   |        |
| 기관        | 241.0  | 370.2  | 129.2  |        |
| 외국인       | 395.7  | 235.6  | -160.1 |        |
| 개인        | 9917.4 | 9993.9 | 76.5   |        |
| 기타        | 145.6  | 101.5  | -44.1  |        |

## • KOSPI 200 선물·옵션

| 종목    | 증가     | 전일대비  | 거래량     | 미결제약정   |
|-------|--------|-------|---------|---------|
| 11월물  | 149.15 | -5.00 | 414,261 | 109,482 |
| 콜1500 | 2.73   | -2.62 | 369,218 | 62,164  |
| 풋1500 | 4.70   | 120   | 165,763 | 64,286  |

## • 금리

| 종류         | 당일시세(연%) | 전일대비  |
|------------|----------|-------|
| 국채         | 3.96     | -0.01 |
| CD(91일)    | 5.69     | -     |
| 회사채(AA-3년) | 8.37     | 0.01  |
| 국고채(5년)    | 5.24     | 0.02  |

## • 환율

| 통화      | 고객 말 때  | 고객 상 때  |
|---------|---------|---------|
| 미국 달러   | 1322.45 | 1369.55 |
| 일본 100엔 | 1352.20 | 1400.36 |
| 유럽 유로   | 1682.92 | 1751.26 |
| 중국 위안   | 187.36  | 211.02  |

# 우리은행 '파워인컴펀드' 손실액 50% 배상 결정

## 금감원 "투자위험 제대로 안 알려" ... 소송 잇따를 듯

은행이 펀드를 팔면서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손실액의 절반을 물어줘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유사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법원 소송이 늘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사3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워인컴펀드' 금융 분쟁에 대해 은행이 신청인에게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5년 11월 정기예금에 가입하려 우리은행을 방문한 주부 A씨(58)는 창구 직원의 권유에 따라 파워인컴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이 급격히 늘어나자 9월 초 중도 해지했다. 이미 펀드에선 1271만3000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다. A씨는 은행 측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

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은행은 펀드 가입 경험 이 없는 A씨에게 파생상품 펀드를 팔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특히 A씨가 해당 펀드를 원금보장 예금 정도로 오해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당시 우리은행의 창구 직원은 A씨에게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가 부도가 나는 확률 수준이다. 그 확률은 0.02% 정도로 극히 낮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조정위는 그러나 "신청인도 '투자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에 직접 서명했고, 거래 통장에 펀드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이 기재돼 있는 만큼 은행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50%의 배상책임은 이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판매사의 배상책임률이 40%를 넘은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정

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최종 판결은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말 우리CS자산운용이 만든 파워인컴펀드는 2300여 명에게 1700억원어치가 팔렸다. 이 펀드는 패니 메이 등 부실 미국 금융회사에 투자해 마이너스 8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김준현·최현철 기자

takeital@joongang.co.kr



◆불완전 판매=판매자가 상품 정보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소비자에게 파는 행위.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회사가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이나 투자 대상 등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을 때가 해당된다.

중앙일보

# '반토막 펀드' 자필서명해도 금융사 설명 미흡했다면 배상

## 금감원, 손실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이 11일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내린 분쟁 조정 결과는 그동안의 결정보다는 한결을 더 나갔다. 지금까지 투자자가 가입자 확인란에 스스로 서명을 하면 구제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엔 주부 A씨가 자필 서명을 했음에도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인정했다. 판매한 은행이 투자자가 알아듣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도 과거 분쟁조정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불만이다. 판매사가 과연 투자자의 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느냐는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위험천만한 상품을 권유했다면 일정 부분 판매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판단은 피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자가 판매사의 실수를 딱 부러지게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받기가 어려울 거란 분석도 있다.

◆분쟁 왜 일어났나=우리파워인컴펀드는 미국·유럽·일본·호주의 112개 주식으로 구성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이 파생상품은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설정 때보다 65%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게끔 설계됐다. 선진국 주식에 골고루 분산했기 때문에

## 왜 손실액의 50% 배상인가

### ▶판매자 과실

- 투자자의 펀드 가입 경험 없음
- 파생상품 팔면서 투자설명서 제공 안 해
- 원금 보장 예금으로 오해하게 유인

### ▶투자자 과실

- 가입 고객 확인서에 서명 날인
- 거래 통장에 펀드의 종류 기재돼 있음
- 투자자로서 주의를 게을리함

## 가입자에 위험 제대로 알렸는지가 핵심

## '자필서명=위험 고지' 관행에 제동 건 셈

2005년 11월 이 펀드를 팔 때만 해도 원금을 까먹을 확률은 거의 없어 보였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이 파생상품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같은 A3 등급을 매겼다.

우리은행은 이를 근거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우리나라가 부도 날 확률보다 낮다"고 광고했다. 여기에도 6년 동안 분기마다 연 6.7%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한다는 은행 설명에 퇴직자나 주부가 많이 가입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주가가 급락하면서 사단이 벌어졌다. 주가가 65% 이상 곤두박질한 종목이 속출하는 바람에 우리파워인컴 2호는 원금의 80% 이상을 까먹었다.

◆금감원 결정의 의미=금융상품을 둘러싼 분쟁에선 투자자와 판매사의

말이 엇갈린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금감원은 고객 확인란에 서명했느냐 여부를 중요한 판단 잣대로 삼았다. 자필 서명을 한 투자자의 편을 드는 데엔 인색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번엔 판매사가 투자설명서를 건네주지 않은 데다 상품 광고가 투자자로 하여금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컸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이 배상 비율을 50%까지 인정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의 최상길 전무는 "이번 결정은 기존 금감원 분쟁조정보다 진일보했다"며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논란 이어질 듯=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이 1998년 러시아 펀드 분쟁에 대

해 내린 법원 판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법원은 판매사가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는 등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실액의 50% 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 법원은 원금에 정기예금 이자까지 더해 손실액을 계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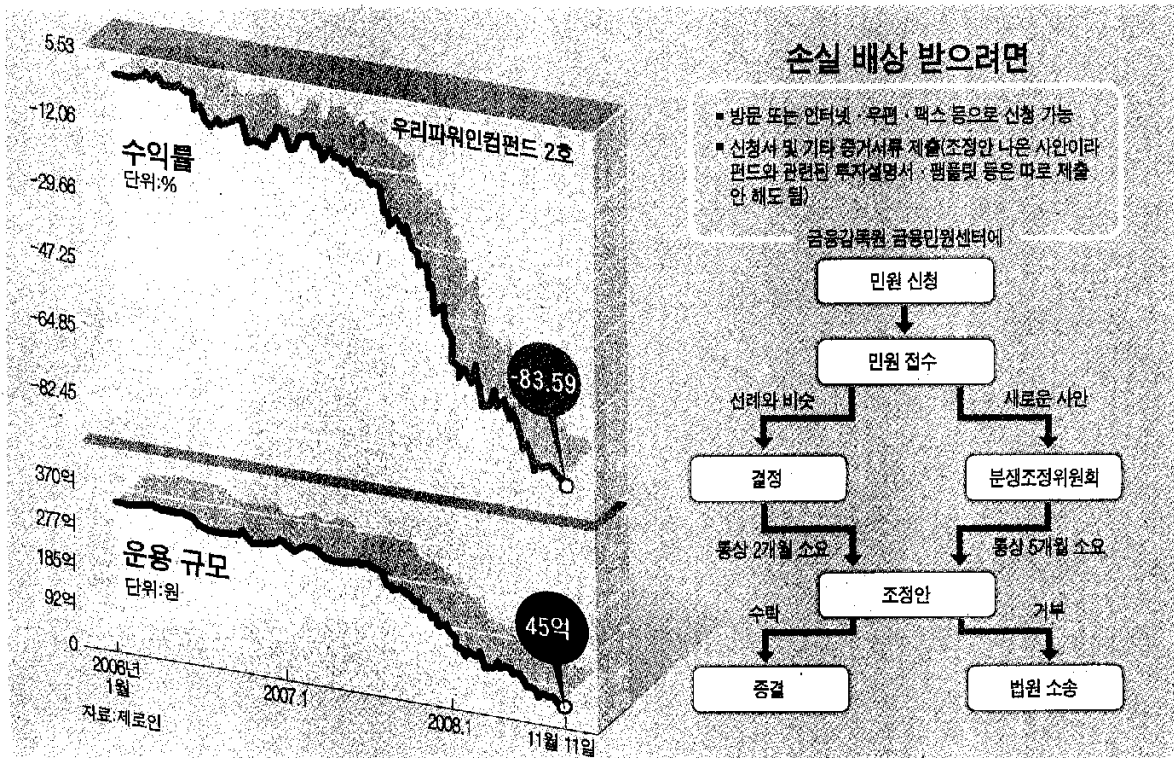
이와 달리 금감원은 펀드 대신 은행 예금에 가입했을 때 받았을 이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투자자가 분기마다 판매사로부터 받은 이자만큼 손실액에서 뺐다. 투자자를 대변한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금감원 계산대로라면 보상액이 원금의 50%가 아니라 30%밖에 안 된다"며 "피해자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판매사가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했느냐는 '적합성 원칙'도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상품 지식이 별로 없는 주부나 은퇴 고령자에게 위험이 큰 상품을 판 것 자체가 판매사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엔 투자설명서 교부나 과장 광고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는 이를 따질 근거가 없다. 투자자교육재단 김일선 상무는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는 관련 규정이 들어갔다"며 "앞으로 판매사가 펀드를 팔 때는 지금보다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민·최현철 기자

jkmo0@joongang.co.kr



## 펀드 환매해 손실액 확정해야만 신청 가능 이번 사례와 비슷하면 배상까지 2개월 걸려

이번 분쟁조정으로 '우리파워인컴펀드'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가 자동적으로 손실액의 절반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을 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다른 투자자들이 손실을 배상받으려면 분쟁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또 조정 신청을 위해선 펀드를 환매해 손실을 확정해야 한다. 정확한 손실액을 알아야 보상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fcsc.kr](http://www.fcsc.kr))·우편·팩스로도 할 수 있다. 신청서와 기타 분쟁 입증에 유리한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엔 이미 조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설명서·팸플릿(광고전단) 등 상품 관련 자료를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만약 판매사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청서와 함께 낸다. 신청 사안이 앞서 배상을 결정했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기존의 조정안에 근거해 손실 배상 범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조정 사례와 비슷한 경우엔 50% 안팎의 수준에서 손실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같은 펀드 관련 분쟁이라도 가입 절차, 가입자의 특성 등이 이번 사례와 확연히 다르다면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다시 해 배상 범위를 결정한다. 통상 위원회 회의를 새로 해 결정하는 데는 5개월이 걸린다. 유사 사례여서 따로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으면 2개월이면 된다.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들이 수용하면 배상액이 확정된다. 만족하지 못했다면 조정안을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지난달 우리파워인

컴에 가입한 160명의 투자자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면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통상 소송까지 가면 조정안보다는 배상액을 더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배상을 받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1심 판결 후 항소심으로 이어지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린다. 또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도 불어난다. 이 때문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사람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배상받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앞으로 펀드에 가입할 때는 투자설명서는 물론이고, 특히 팸플릿을 잘 챙겨야 한다. 투자설명서보다도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기 때문이다.

고탄 기자 [neoran@joongang.co.kr](mailto:neoran@joongang.co.kr)

# 은행·운용사 “유사 분쟁 늘까 걱정”

무리한 판매 관행엔 동감... 투자자도 가입 때 주의해야

11일 오후 펀드 업계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과워인컴’과 관련한 분쟁조정이 앞으로 펀드 줄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들이 경쟁이 붙으면서 ‘묻지마 판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비슷한 분쟁이 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 A자산운용사 사장은 “펀드 가입 서류에 서명해 놓고 나중에 손실이 나면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례까지 배상하라는 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B운용사 사장은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날 때마다 소송·민원을 제기하면 된다는 생각이 퍼지면 시장 전체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선 이번 결정을 계기로 무리한 판매 관행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많다. 일부 은행은 목표치를 정해 놓고 계열 운용사 펀드를 밀어내기 식으로 팔아오기도 했다. C운용사 사장은 “지난해 말 해외주식형 펀드 붐이 일자 일부 은행이 특급 호텔에서 식사·와인이 포함된 설명회를 열어달라고 하더라”며 “해외 세미나 명목으로 골프여행을 요구한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수료를 낮춘 펀드를 들고 은행에 갔더니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 덧붙였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운용사가 자신들도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해외 금융 회사의 복잡한 금융상품을 들여와 포장

만 바꿔 팔았다”고 말했다. 마이다스에셋운용 조재민 대표는 “업계가 최근까지 투자 위험은 최대한 줄여서 알리고 장밋빛 전망은 부풀린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투자 위험은 물론 해당 펀드가 고객의 형편에 맞는 지까지 생각해서 팔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리안츠GI운용 이원일 사장은 “지금처럼 운용·판매사는 무조건 돈을 벌고 투자자만 손해 보는 구조라면 펀드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자도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판매 직원 말을 덮어놓고 믿거나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선하기자

odinelec@joongang.co.kr

중 앙 일 보

해외에선 어떻게

## 홍콩銀, 리먼관련 '미니본드' 투자자에 원금지급 결정

미국·싱가포르에서도 홍역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들과 금융회사 간 갈등은 해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홍콩은 투자원금을 배상토록 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선 투자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일부에선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펀드 판매를 둘러싼 글로벌 분쟁의 중심엔 지난 9월 파산한 리먼브러더스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IB)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지 두 달 가까이 흘렀지만 그 후 폭풍은 잔잔할 수 없이 커지며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리먼브러더스 관련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세계 각국 투자자들이 상품 가입을 권했던 은행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지난 9일 리먼브러더스의 채권파생상품인 '미니본드'를 매입했던 홍콩 투자자 800여명이 거리로 나와 촛불시위를 벌이며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들에 손실배상을 요구했다. '홍콩 리먼브러더스 관련 피해자들의 모임' 회장인 피터 찬씨는 "리먼브러더스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들로선 천재지변과도 같은 일"이라며 "은행들이 미니본드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홍콩 은행업계에 따르면 미니본드를 사들인 홍콩 투자자들은 약 4만3700명이며, 이들의 투자금액은 모두 157억 홍콩달러(약 2조7004억원)에 달한다. 홍콩 정부는 투자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지난달 말 은행들에 미니본드 재매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자배상까지 함께 요구하며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에선 약 1만명의 투자자들이 리먼브러더스의 미니본드로 인해 3억3800만달러(약 4495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지난달 말 투자자 500여명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문제삼으며 정부에 대해 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국에선 채권에 투자한 은퇴자들이 리먼브러더스 관련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직격탄을 맞았다. 블룸버그통신은 UBS미국법인이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했던 채권 판매 관련 손실로 고객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위기를 맞았다고 전했다. UBS는 65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보장과 안정적 수익을 광고하면서 총 10억달러 규모의 구조화채권을 팔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이 채권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됨에 따라 채권 매입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갈등 사례

| 국가   | 주요 내용                                                                                         |
|------|-----------------------------------------------------------------------------------------------|
| 미국   | 투자자 10여명이 UBS미국법인 상대로 리먼 채권 손실배상 소송 준비                                                        |
| 홍콩   | 투자자 3명이 원형은행 등 홍콩 3개은행에 리먼 채권파생상품 '미니본드'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 제기<br>정부, 불완전판매 여부 관계 없이 미니본드 투자원금 배상 결정 |
| 싱가포르 | 투자자 500여명이 정부에 미니본드 손실 배상 요구 시위<br>인도네시아인 부부가 UBS싱가포르법인 상대로 860만달러 규모 소송 제기                   |

한 국 경 제

## 현명한 장기투자 문화

### ② 희망이 살아있는 이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 1500, 코스피 1000 붕괴로 상징되는 10월은 한국에 제2환란을 우려케 한 잔인한 달이었다. 이제 금융시장 붕괴에 대한 공포는 어느 정도 가셨지만 그 자리를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차지했다. 예상치 못한 위기인 것은 맞으나 저자를 위한 노력이 있는 만큼 비관할 할 것도 못된다는 지적이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밀거름인 장기투자를 포기할 정도의 '대공황'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환란 우려를 벗다=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과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유사시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고환란이라는 스와프라인을 개설했다. 금액의 다과를 떠나 우리나라가 기축통화인 '미달러 우산' 아래 들어갔다는 큰 의미가 있는데 외국인들도 놀란다는 반응이었다. 전통적으로 미달러가 신흥시장으로 흘러가는 공적 루트는 국제통화기금(IMF)밖에 없는 관행을 깨트렸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같은 결정타로 제2환란 우려를 날려버리며 건디기

힘들 정도의 금융시장 불안은 제거됐다.

실물부문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미국의 실물경제 침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중국의 내년 성장률이 7%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1929~33년 대공황과 다르다=하지만 증시전문가들은 대공황 때와 같은 심각한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1929~33년 대공황은 고유명사로 쓰일 정도의 특이한 역사적 경험이다. 1920년대 중후반 뉴욕 증시 붕괴의 저금리·고유동성 정책에서

잉태된 자산거품이 29년 긴축으로 터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925~28년 금본위제 하에서 뉴욕 준비은행은 저금리정책을 펴다 금이 유럽으로 유출되고 자산거품이 생기자 29년 갑자기 긴축정책을 취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대공황의 시작 자체는 작은 것이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세련된 통화정책과 금융규제정책, 글로벌 공조의 활은 안전망이 없어 필요이상으로 공황이 확대됐다. 경기가 수축하는데도

긴축을 이어갔고 은행이 파산해도 구제하지 않고 내버려둬 신용경색이 극에 달했다.

1929년 10월 대공황 시작 이후 1933년 증시가 최저점에 이르기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30% 감소했고,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25%에 달했다. 1930년대 미국 은행 2만 5000개 중 9000여개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지금 각국의 정책대응은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선진 각국의 금리인하는 기본이고 케인시언적 재정지출이 처방으로 부상했다. 미국에서 7000억달러 규모의 금융사 구제금융에 이어 오바마 당선인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도 2010년까지 인프

환란우려 벗었고

대공황 때와 다르고

한국기업 강하고

# 투자? 생각대로 하면 되고!

한·미 통화스와프 금융시장 불안 해소  
세련된 정책·글로벌공조 경기침체 대응  
외환위기 거치며 기업 생존력도 진화



라 투자를 중심으로 4조위안(약 7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가 당장에 경기부양이라는 효험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경기회복 정도와 시간을 줄이는 데는 분명 기여할 전망이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다극화 흐름을 주어왔다. 미국 유럽 등의 마이너스 성장에 예고됐지만 중국 등의 부상으로 세계경제는 내년 되고 있다. 중국도 2010년까지 인프

전망했다.

◇한국기업들도 과거와 다르다=안으로는 부동산 거품 붕괴가 우려된다. 그러나 가계부채 상환부담에 영향이 큰 금리만 안정되면 또다른 위기로 폭발하지 않고 관리 가능한 수준에 묶어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기업의 생존력이 강해진 점도 장기투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정보기술(IT)·조선·자동차 등에서 세계 수위를 다

투는 기업들이 있고 매출 대비 이익률,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이 환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졌고, 안정성도 높아졌다"며 "과거에는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300% 이상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수 기업이 100% 이하로 낮았다"고 말했다.

백진영·김민선 기자 jback@

머니투데이

# 동고동락한 펀드는 배신하지 않는다

#박모씨 (59·자영업)는 2003년 3월 퇴직금의 일부인 5000만원을 현대 모비스에 투자해 5년 넘게 보유 중이다. 당시 매수금액은 1만 9000원대. 지난 7월 마감가가 7만 5700원이었으니 누적수익률 298%, 평가차익만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7월 사상 최고치인 11만원까지 올랐을 때 팔았다면 지금보다 1억 원은 더 만졌을 테지만 후회는 없다.

박씨는 회사의 성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이제껏 투자했고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

#송모씨 (39·회사원)는 90년대 후반 '바이코리아' 열풍을 일으킨 '바이코리아펀드'(현 '푸르덴셜나폴레옹 정통액티브주식1')를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 1999년 9월 2500만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고 7월 현재 수익률은 96%다. IMF 위기와 대우채 사태, 정보기술(IT) 거품으로 증시가 곤두박질치자 대부분 투자자가 환매한 2000년, 송씨의 수익률도 -40%까지 떨어졌다. '시간'에 투자하며 인내한 끝에 원금만큼의 이익을 얻게 됐지만 지난해 10월 고점일 때 무려 400%의 수익률을 올린 것을 생각하면 아

1999년 이후 설정된 펀드  
(기준일: 2008.11.07, 단위: 억원, %)

| 펀드명                                  | 순자산   | 설정후    |
|--------------------------------------|-------|--------|
| 프랭클린템플턴그로스주식형 5                      | 605   | 273.02 |
| 하나UBS안정성장1월호주식                       | 185   | 201.09 |
| 푸르덴셜나폴레옹정통액티브주식 1                    | 2,965 | 200.24 |
| 하나UBS First Class<br>에이스주식(ClassC 1) | 2,066 | 106.12 |

99년 2500만원 투자... 수익률 96%

'반토막 펀드' 사이 장기펀드는 선전

쉽기도 하다.

송씨는 "수익률이 400%까지 뛰었을 때 환매하지 않은 것을 왜 후회하지 않겠느냐"며 "그 돈을 찾아서 은행에 넣거나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다른 펀드에 가입하거나 주식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손실이 나는 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선불리 환매해 손실을 확정짓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게 송씨의 10년 투자교훈이다.

장기투자 바람이 분다고 하지만 사실 국내에서 '진정한' 장기투자자를 찾는 건 쉽지 않다. 국내 주식시장이나 펀드시장이 활성화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유

도 있지만 무엇보다 짧은 시간에 '화끈한 수익률'을 바라는 한국인 정서상 몇십 년씩 '물어두고 기다리는' 투자는 매력적이지 않다.

'국내 최초 주식투자신탁펀드'로 기네스북에 오른 '하나UBS안정성장1월호주식'은 1970년 5월에 설정됐다. 설정된 지 38년, 사람으로 치면 '불혹'의 나이이다. 그러나 이 펀드와 함께 수십년 동고동락한 투자자는 찾기 어렵다.

하나UBS자산운용 관계자는 "하나UBS안정성장1월호주식"은 70~80년대(당시 대한투자신탁) 수천억원의 규모를 자랑했지만 IMF체제를 지나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운용이 안되고 거의 죽은 상태였다"며 "2005~2006년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펀드 리모델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전했다. 현재 설정액은 185억원. 모두 2000년 증반에 들어온 '뉴머니' (New Money)다.

만일 70년대 설정 이후 아직도 보유 중인 투자자가 있다면 현재 누적 수익률은 201%. 지난해 10월 말 474%까지 수익률이 뛰었다가 최근 증시 급락으로 악화되긴 했지만 '반토막 펀드'로 시름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일 성과다. 박성희 기자 stargirl@

협찬 :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협회 동양증권금융증권 KB자산운용

머니투데이

# 아직도 '묻지마 펀드'?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 펀드 가입때 꼭 챙길 사항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펀드가 반토막 나자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승소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현실이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를 '투자의 기본'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언젠가 다시 투자에 나설 것이기에 '수업료'를

들이 꼼꼼히 챙겨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상담 때 받아둔 투자설명서와 각종 광고전단은 반드시 챙겨 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특히 광고 전단은 일반적인 투자설명서보다 다소 과장된 표현을 담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가입할 때 챙겨둔 전단을 판매할 때까지 아예 펀드통장에 끼워넣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요즘은 휴대전화나 엠피3 플레이어로도 녹음이 가능한 만큼 투자상담

## 판매자 수당 챙기려 장밋빛 전망 일삼아 '과대포장' 전단지 챙겨두면 분쟁때 유용 상품성격 등 담긴 '운용제한서' 살펴봐야

낸 만큼 확실히 배워두자는 것이다.

모든 투자행위가 그러하듯 펀드투자도 투자자의 처지(현금흐름 등)와 투자 목적, 목표수익 등이 명확해야 한다. 은행예금과 달리 원금을 까먹을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맞춰 적절한 펀드를 고르기 위해선 판매직원한테 상품의 성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판단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은행과 증권사 직원들은 펀드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수당을 챙기기 위한 고객 유치에만 급급해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을 가능성이 높다. 별도의 공간에서 고객 성향을 파악한 뒤 상품을 파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른 고객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은행 창구 등에서 한꺼번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까닭에 고객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진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006~2007년 펀드 열풍 속에서 시중은행들은 예금하러 온 고객들한테도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며 은행의 과도한 펀드판매 드라이브를 비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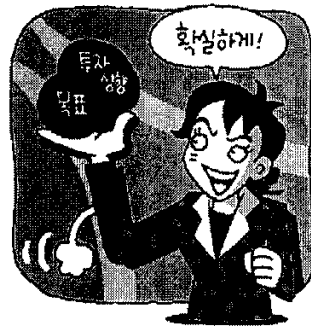
이처럼 판매사 입장에서 제대로 된 물건을 골라주기보다 많이 팔면 그만큼 구조에서 성실한 상품 설명(위험 고지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만큼 투자자

내용을 녹음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업계 선두권의 자산운용사 팀장은 "면전에서 녹취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신중하게 다시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어려울 것도 없다"고 말했다.

기존 펀드 가입자들도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운용제한서'를 판매사에 요구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펀드 약관이나 투자설명서와 달리 제한서에는 상품 구조와 성격이 비교적 잘 나와 있다. 낯모양인 증권이게 웬 펀드리서치팀장은 "판매사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투자자들도 투자의 기본원칙을 잊어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면 '표준판매 매뉴얼 6단계'가 시행돼 분쟁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단계 매뉴얼은 투자자 성향 파악→투자자 유형분류(위험회피형, 안정형, 안정성장형, 성장형, 공격형)→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 제시→펀드에 대한 설명→투자자 의사확인→사후관리 등을 시키도록 하고 있어 현재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창현 기자 blue@hani.co.kr



■ 펀드 안전하게 가입하려면...

## 과장표현 광고전단 꼭 보관 상담내용 녹취도 좋은 방법

1년 전에는 너도나도 펀드에 가입하려고 은행 창구에 투자자들이 줄을 섰지만, 지금은 반대로 손실 난 펀드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이나 분쟁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에서는 가입 상담 시 투자자들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서 맞서고 있다.

당시 펀드에 가입했던 많은 투자자에게는 이미 늦은 애기겠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을 확실하게 보상받으려면 펀드 가입 시 다음의 몇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권고한다.

우선 투자 상담 시 받아 놓은 투자설명서나 각종 광고 전단은 버리지 말고 반드시 챙겨 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광고 전단에는 '절대수익 보장' '수익성과 안전성 동시 추구' 등 펀드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는 과장된 표현들이 종종 들어가 있다. 이 같은 표현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된다.

또 휴대전화 또는 소형 녹음기기를 사용해 판매사와 투자 상담을 할 때 그 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은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책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즉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미리 상담 내용을 녹음한다고 밝히면 판매인이 이를 의식해 상품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녹취까지 하는 것이 너무 심한 방법이라면 판매사 직원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할 때 이를 수첩에 적어 놓는 것도 나중에 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입 이후도 중요하다. 판매사에 펀드제안서를 요청해 수시로 읽어 보고,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가는 등 개인정보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충실하게 수정해야 한다.

실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9월 펀드 부당판매 관련 분쟁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가입자가 주소 변경 등 고객정보 변경을 소홀히 해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가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가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액을 낮춘 바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상품 설명을 듣기도 전에 함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투자자의 서명은 판매사들에게는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무리 판매사의 설명이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자필 서명을 하고 나면 소송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동 아 일 보



펀드로 까먹은 돈 채워넣으려면...

# 연말 소득공제 더 간간하게 챙기세요!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the Basics).’

재테크 환경이 어렵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주식투자가 쉽지 않다. 부동산도 침체 국면이어서 선뜻 투자에 나설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살아 있는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은 ‘잃지 않는다’를 제1원칙,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다’로 삼았다고 한다. 워런 버핏은 특히 절세에 엄청난 신경을 썼다.

이번 겨울에는 우리 모두 버핏처럼 돼 보자. 연말 소득공제는 챙기지 않으면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쓴 돈은 돌려준다’고 법령에 정해 놓은 것을 찾아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직장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연말 소득공제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상품(연금펀드 연금신탁 연금보험 등)이다. 두 상품 중의 경우 각각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과세 표준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해 준다는 얘기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한 경우 세금 환급액은 웬만한 봉급생활자의 한 달 급여에 이른다. 먼저 연금신탁에 30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750만원을 가입한 연봉 6000만원의 A씨 사례를 생각해 보자. A씨는 연초 연금신탁에서 30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300만원 등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주민세를 합친 소득세율이 28.6%이기 때문에 A씨는 내년 2월 월급통장에 171만6000원(600만원×28.6%)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A씨의 연봉이 1억원이라면 환급받는 세금은 더 많아진다. 세율이 38.5%이기 때문에 231만원(600만원×38.5%)이 불어난 월급통장을 받게 된다.

펀드 투자 때도 절세 효과를 노리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가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3년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며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해는 불입액의 20% △둘째 해는 불입액의 10% △셋째 해는 불입액의 5%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매달 100만원씩 가입하면 3년간 140만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가능한 한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거나, 현금을 낼 때는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필수다. 올해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 대상 사용금액이 바뀐다. 지난해에는 ‘연간 급여의 15% 초과 금액에 대한 15%’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20% 초과 금액에 대한 20%’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최저 사용액 기준을 넘기면 오히려 더 많은 비율의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액 현금을 낼 때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에 대해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창피하게 생각해서 받지 않은 만큼 내 지갑이 얇아지고 정부 지갑은 두꺼워지는 법이다.

연말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에 관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 과세율인 15.4%를 적용받지 않고 9.5%를 적용받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경우 내년부터 가입 한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액 비과세하는 생계형 저축의 경우 올해까지는 남자 60세, 여자 55세가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남녀 모두 60세로 바뀌므로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부모를 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가입시켜 드리면 조금이나마 효도하는 길이라 하겠다.

큰 내용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바뀐 제도를 유심히 살펴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등의 1인당 교육비 공제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대학생 역시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커진다.

정치후원금 등 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 한도도 소득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도 포함된다.

글로벌 금융시장 악화에다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대부분 재산이 줄고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잘 대비해 ‘13월 월급’을 받는다면 적잖은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 받으려고 펀드 올인?

# 분기별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됩니다



## ■ 펀드 소득공제 A to Z

국내 주식에 60%이상 투자  
적립식 펀드만 혜택

내년부터 환급세액 줄어  
올해 가입해야 절세 효과 커

기존 가입자도  
계약 갱신엔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 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13일의 보너스'를 받는다. 정부가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3년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펀드 투자는 길게 보면 현재 반토막난 펀드 수익률도 만회할 수 있는 데다 매년 초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 투자상품인 셈이다. 기존 펀드의 만기를 3년 이상 연장해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굳이 펀드에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던 국내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나머지 배당 소득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 사실상 펀드 이익에 붙는 모든 세금을 면제받는다.

### ◆분기별 한도는 300만원

펀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만기는 3년 이상으로 해야 하고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 조건에 맞는 펀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다.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해는 불입액의 20% △둘째 해는 불입액의 10% △셋째 해는 불입액의 5%다.

가령 연봉이 3000만원인 급여소득자가 내년 초부터 매달 50만원을 국내 주식형 펀드에 넣으면 2010년 1월에 21만1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1년 불입액 600만원에 20%(소득공제율)를 곱한 뒤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계(17.6%)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다. 이런 식으로 3년간 총 36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소득세를 많이 내는 고액 연봉자는 소득공제 효과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봉급자가 불입 한도(연간 1200만원)를 최대한 활용해 매달 100

만원씩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세금이 3년간 총 71만9000원 감감되지만 연봉 8000만원인 봉급자의 경우는 113만5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 표준 소득액이 8800만원을 넘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는 매달 100만원씩 불입할 경우 최대 140만14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율이 높은 소득 구간의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 절감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펀드에 편입된 주식(통상 펀드 자산의 90%)의 배당과 나머지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3년간 10만원 정도의 세금 절감 혜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연내에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소득세율이 내년부터 현재보다 2%포인트씩 낮아지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내는 세금이 더 많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또한 올해가 더 많다.

### ◆기존 가입자들도 혜택

신규로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런'(대규모 펀드 환매)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가입자들은 펀드 판매회사와 계약을 3년 이상 갱신한 뒤 투자액을 불입하면 된다. 그러나 이미 넣어둔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없다. 한 사람이 여러 금융회사에 적립식 펀드를 개설할 수 있지만 모두 합해 1인당 분기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한정돼 있다.

부부라도 개별로 가입할 수 있다. 이때도 1인당 불입 한도는 각각 분기별 300만원이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으면 소득공제 혜택은 없고 배당소득만 비과세 된다.

2009년 말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펀드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입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년까지만 혜택이 주어진다. 매달 일정액을 불입할 필요도 없어 자유 적립식으로 투자해도 분기별 공제 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목돈을 물어두는 가치식 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여서 기존에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이번엔 생긴 펀드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만기를 3년 이상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펀드런이 일어나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인실 기자 surisuri@hankyung.com

| 연소득별 소득세율       | (주민세 포함) |      |      |      |
|-----------------|----------|------|------|------|
|                 | 세율(%)    |      |      |      |
| 올해              | 8.8      | 18.9 | 28.6 | 38.5 |
| 내년 이후<br>(추진 중) | 6.6      | 16.5 | 26.4 | 36.3 |

| 연소득 | 1200만~4600만 원 이하 |                  |                  |            |
|-----|------------------|------------------|------------------|------------|
|     | 1200만 원 이하       | 1200만~4600만 원 이하 | 4600만~8800만 원 이하 | 8800만 원 초과 |



### 펀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 구분                | 장기주식형펀드                    | 장기회사채형펀드                     |
|-------------------|----------------------------|------------------------------|
| 적용대상              | 펀드 자산의 60% 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    | 펀드 자산의 80% 이상 국내 회사채, CP에 투자 |
| 가입자격              |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             |                              |
|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연 1200만원)     | 총 3000만원 이내                  |
| 투자기간              | 3년 이상(적립식)                 | 3년 이상(가치식)                   |
| 불입액의 일정부분 소득공제    |                            |                              |
| 세제혜택              |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
| 비과세: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                            |                              |
| 가입시한              | 내년 발표 시점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

## 회사채형 펀드도 3년 투자팬 비과세

장기 회사채형 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거치식 펀드 중 유일하게 비과세 혜택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은 이번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 메리트가 다소 감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회사채형 펀드 배당소득 비과세

회사채형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회사채형 펀드란 국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로 A등급 회사채를 펀드 자산으로 편입한다.

지난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회사채형 펀드에 신규로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3년 동안 적용되며 전 금융사를 통틀어 1인당 3000만원까지다. 기존에 가입한 국내 회사채형 펀드도 앞으로 3년 이상 더 유지하겠다고 계약을 갱신하면 그날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이후 3년 동안 원금이나 이자 인출이 없어야 한다. 가입 후 3년이 지난 다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과세한다.

회사채 전용 펀드는 수수료 등을 제외한 실질수익률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와 비슷한 연 8%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면세 효과까지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은 정부 발표 이후 회사채 전용 펀드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하나UBS자산운용은 지난달 27일 회사채 전용 펀드인 '하나UBS 장기회사채 채권투자신탁'을 내놓았으며 대우증권은 지난 4일부터 연 8%의 목표수익률을 추구하는 '산은 장기회사채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 밖에 SH자산운용과 한국운용 등도 장기 회사채형 펀드를 선보이고 있다.

### ◆변액연금금은 혜택 없어

이번에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됐다. 장기 회사채형 펀드와 적립식 펀드는 앞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만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액보험 등 보험상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그러나 변액보험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효과 중복이 문제여서 장기 적립식 펀드처럼 소득공제 기능이라도 넣었으면 상품 경쟁력이 살아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대부분 개인이며 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펀드 투자와 마찬가지로 변액보험을 통해 50% 안팎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5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이 중 80%가량을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변액보험에서 투자하고 있는 순자산만 30조원이 넘는다. 이는 국내 펀드 순자산의 10% 이상이다.

정인철 기자 surisuri@hankyung.com

## 국내주식펀드 오래된 대형펀드 위주로 환매

해외주식형은 중.브릭스투자펀드에 환매 집중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최근 환매가 많이 발생한 국내 주식형펀드는 대부분 3년 전에 설정된 대형펀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펀드는 중국과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등 4개국)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주로 환매가 발생했다.

12일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10일 기준으로 순자산 100억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303개(인덱스펀드 제외) 가운데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금융위기가 심화한 7월 초부터 발생한 자금 순유출 상위 10개사를 조사한 결과, 9개 펀드가 모두 2006년 전에 설정됐으며 순자산이 1조원이 넘는 대형펀드도 7개나 됐다.

1천618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한 '미래에셋솔로몬주식1'은 2002년 12월 설정됐으며 순자산 규모도 1조4천487억원이나 됐다.

이어 876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2 클래스-A'도 2005년 11월 설정됐으며 순자산 규모는 1조5천232억원이었으며 66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된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도 비록 순자산은 9천326억원으로 1조원을 넘지 못했으나 2001년 7월에 설정됐다.

업계는 설정일이 3년이 넘는 펀드의 초기 투자자들은 아직 손실이 나지 않았거나 손실 규모가 크지 않아 환매에 부담이 적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펀드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펀드에 비해 환매규모가 큰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자산 100억원 이상인 해외 주식형펀드 283개 중 환매규모 상위 10위내는 모두 중국과 브릭스에 투자하는 펀드였다.

같은 기간 '슈로더브릭스주식형-자A-1'에서 3천529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비롯해 '봉쥬르차이나주식2종류A'(2천95억원),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1종류A'(1천910억원), '슈로더브릭스주식형-자A'(1천525억원), '슈로더차이나그로스주식종류-자(A)종류(A)'(1천6억원) 등 순이었다.

제로인의 이수진 펀드애널리스트는 "국내 주식형펀드는 그동안 환매 규모도 커졌지만 유입규모가 큰 펀드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nadoo1@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등록일 : 11/12 07:01

# 3분기 주식펀드 계좌 72만개 급감

지난달 펀드수도 줄어... 간접투자 시장 위축  
“내년 1분기쯤 자금유입 투신권 매수 나설 것”

■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로 인해 간접투자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증시 부진에 따른 수익률 하락 여파로 지난 3분기(7~9월) 주식형펀드의 전체 계좌 수가 72만 개 가까이 감소하고 최근 들어 펀드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간접투자 시장 위축은 자산운용업체가 주식매입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증시 반등과 투자심리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낙폭이 과도하고 매력적인 저가 우량주들이 많지만 펀드에 돈이 들어

오지 않는 이상 주식을 살 수 없다”며 “내년 1분기(1~3월) 정도는 돼야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증시로 돈이 들어오면서 투신권이 다시 주식 매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11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국내외 주식형펀드의 계좌수는 1745만2589개로 지난 6월말의 1817만2827개에 비해 무려 71만7713개(3.9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19만5284개와 17만6587개가 감소한 데 이어 9월에는 34만5842개나 줄어 감소폭이 전월

에 비해 거의 배로 늘었다.

이같은 주식형펀드의 감소세에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적립식펀드의 감소했기 때문. 지난 9월말 적립식 펀드의 계좌수는 1508만개로 지난 8월보다 28만6000개가 감소했다.

적립식 펀드 계좌수는 7월 1551만개, 8월 1536만개, 9월 1508만개 등으로 점차 감소 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식형펀드(상장주식펀드 제외)의 자금은 지난 10월에 단 총 1조3582억원이 순유출됐는데 이는 2007년 4월 이후 18개월 만에 최대규모다.

이런 가운데 주식형펀드의 수도 지난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현재 1387개로 9월에 비해 11개가 감소했다. 이 중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2개가 감소한 반면 해외주

식형펀드에서 9개가 줄었다. 주식형펀드의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올해 들어서도 매달 꾸준히 두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7월부터 한자리수 증가로 위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형펀드의 주식 편입 비중은 지난 10월초 87.29%에서 최근 86.68%로 줄었다. 이는 자산운용사들이 혹시 모를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에 대비해 현금보유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펀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반토막 나면서 투자심리가 극도로 악화돼 간접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원 기자 mindom@munhwa.com

## ‘서울신문

2008년 11월 12일 수요일 017면

# 미분양아파트 펀드 없던일로?

“부동산 경기침체 수익성 낮아”  
증권사들 “검토안해” 이구동성

“지금으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성에서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증권사 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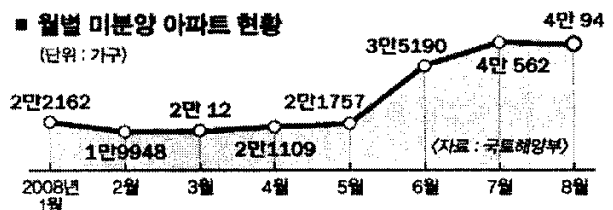
금융경색의 뇌관격인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풀 대안으로 정부가 내놔던 미분양 아파트 펀드가 전혀 시장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분양 펀드 정책은 “폭탄을 제거하려다 폭탄을 만드느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펀드화를 언급한 지난달 21일 건설산업 대책 이후 지금까지 시장에 출시된 관련 미분양 아파트 펀드 상품은 0개다. 상품 출시를 겨냥해 내부적으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회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펀드는 금융회사가 출자해 펀드를 구성, 따로 유동화법인을 세운 뒤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서 매각한다는 방안이다. 유동화법인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은 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팔게 된다. 이 펀드가 냉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문제다. 이상엽 KB자산운용 국내부동산팀장은 “정부 방안에 따르면 미분양 펀드 수익률이 9~10% 수준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리스크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극히 낮다.”고 말했다. 특히 “미분양 펀드의 특성상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 같은 큰 손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회사채 수익률만 해도 7~8%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어느 기관이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더구나 취득세 등 거래비용만도 4~5% 정도는 차지할 것이라고 업

■ 월별 미분양 아파트 현황  
(단위: 가구)



계는 내다보고 있다. 2~3년 미분양 펀드를 잘 운용해 9~10% 수익률을 내놔자 4~5% 비용에다 그 동안 오를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장사다. 한나라당에서는 이 세금이라도 줄여 주겠다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낮은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익률을 무한정 늘려줄 수도 없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 제1·2금융권 모두 8%대에 이르는 높은 이자율로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 자금을 굴려서 운용수익을 낸다면 미분양 펀드 수익률이 20%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미분양 펀드가 아파트를 사들일 때 가격을 후려쳐서 싸게 사들여야 한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정부 대책 이전에 시장은리에 따라 이미 관련 펀드가 나왔을 것”이라면서 “그 동안 고분양가로 누린 혜택을 뱉어 내고 수요 예측을 잘못된 실책을 반성하도록 하는 정공법을 정부가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낙엽 떨어지면 돈다... 배당주의 계절

## 배 불리는 종목 따로 있더라

가을에 거리에서 마주치는 낙엽은 여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거리에 떨어진 낙엽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배당주에 투자할 때구나!"

주식 배당을 받으려면 결산일로부터 3거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확보하면 된다. 즉, 대부분 기업의 결산일인 12월 말까지만 주식을 사놓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당률(배당금액을 주가로 나눈 값)이 높은 주식의

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최근 1개월, 3개월 평균 수익률이 각각 -11.3%, -26.1%인 데 반해 같은 기간 배당주펀드 평균수익률은 각각 -12.3%, -26.0%로 1%포인트 정도 낮다. 하지만 6개월, 1개월 평균수익률은 배당주펀드가 국내주식형 평균보다 각각 12%포인트, 25%포인트 정도 높다.

배당주펀드는 경기가 좋을 때는 일반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에 못 미치지만 약세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특징을 보인다. 배당주펀드가 주로 편입하는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들이 주로 안정적

◆주가방어, 배당수익 두 마리 토끼 노려볼까

최근 전 세계 경제를 한마디로 집약하는 키워드는 '실물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려 한다면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는 종목이나 펀드 위주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배당주펀드도 마찬가지다. 증시 전문가들은 "배당주펀드에 투자하더라도 배당률만 따질 것이 아니라 편입종목을 먼저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주요 배당주펀드에 가장 많이 편입된 주식들은 삼성전자, POSCO, 현대차, LG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 SK텔레콤, KT&G, KT, 한국전력 같은 경기방어주, 국민은행, 신한지주, 삼성증권 같은 금융주 등이다. 편입 종목이 비슷하더라도 비중을 얼마나 다르게 가져가느냐가 펀드의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그동안 약세장에서 주가가 덜 떨어졌던 삼성전자나 경기방어주인 KT&G 같은 종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배당주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한 데 비해, 그동안 변동성이 컸던 POSCO, 현대차 등의 비중이 높았던 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제로인 이수진 펀드매니저는 "골독주 같은 성장주의 비중이 낮고 통신·전기가스 같은 경기방어주나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종목이 충분히 편입돼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며 "그 다음에 배당수익률이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는지,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돼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재근 기자 [junian@chosun.com](mailto:junian@chosun.com)

주요 배당주펀드 최근 수익률 추이 (1년 수익률 순, %)

| 펀드명                      | 1개월    | 3개월    | 1년     | 연초후    | 배당수익률 |
|--------------------------|--------|--------|--------|--------|-------|
| 프런티어배당한아름주식CLASS C 1     | -10.03 | -29.31 | -29.71 | -29.60 | 2.63  |
| 그랑프리포커스배당주식 1C클래스        | -9.38  | -30.57 | -32.88 | -30.88 | 2.56  |
| 신영밸류고배당주식 1C4            | -13.23 | -33.25 | -34.54 | -34.32 | 2.90  |
| 알리안츠고배당주식G- 1(C/A)       | -11.09 | -32.18 | -35.56 | -34.96 | 3.85  |
| 프라임배당적립주식                | -12.49 | -33.51 | -36.61 | -34.91 | 2.84  |
| 신영고배당주식(A형)              | -12.15 | -33.09 | -36.10 | -34.62 | 3.10  |
| 프라임배당주식                  | -13.29 | -34.33 | -36.20 | -36.53 | 2.87  |
| 대신소망가독적립배당주식 1           | -11.53 | -31.78 | -36.73 | -34.49 | 2.40  |
| 한국셀렉트배당주식 1(A)           | -9.02  | -26.06 | -37.19 | -31.67 | 2.78  |
| 미래에셋3억만들기배당주식 1(CLASS-A) | -13.23 | -33.84 | -37.32 | -36.41 | 2.72  |
| 마이다스배당대계적립주식             | -12.29 | -32.67 | -37.81 | -34.30 | 3.28  |
| 하나UBS배당60주식 1종류A         | -9.49  | -32.33 | -39.08 | -34.88 | 2.14  |
| 현대하어로알짜배당주식              | -12.13 | -34.14 | -40.55 | -36.12 | 1.98  |
| 세이코배당주식형(종목형)ClassCe     | -12.30 | -35.69 | -41.28 | -42.95 | 5.36  |
| 푸르덴셜배당포커스주식 1(B)         | -11.69 | -35.74 | -41.70 | -37.94 | 3.87  |
| 프레스티지고배당주식 1             | -12.05 | -36.13 | -43.51 | -40.91 | 2.52  |
| 하이코초이스배당주식 1             | -14.87 | -39.84 | -43.98 | -41.56 | 2.39  |
| 국내주식형 유형평균(대상 수: 696개)   | -11.27 | -36.10 | -43.03 | -38.21 |       |

자료: 제로인, 손자산 10억원 이상, 11월 10일 기준

### KT&G·한국전력 등 경기방어주 비중 높으면 유리 POSCO·현대차 같은 성장주 위주는 수익률 떨어져

경우 배당을 노리고 진작부터 선점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보유하려면 낙엽이 지는 요맘때가 투자의 적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배당수익이 많은 주식을 골라 투자하면 될까.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경제상황 같은 주변 상황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배당만 보고 들어갔다가 주가가 폭락하면 도리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배당주펀드를 이용해 배당주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약세장에선 배당주 펀드가 선방

최근 배당주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국내 주식형펀드 평균에 못 미친다. 펀드평

인 대형주나 경기방어주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약세장을 잘 방어해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중순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부터 코스피지수가 938.75로 바닥을 찍으며 32%나 폭락했던 한달 여간의 폭락장에서 수익률 상위 국내 주식형펀드 10개 중 3개가 배당주펀드로 나타났다. 하락장에서 배당주펀드가 진면목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경기방어주 비중이 높은 배당주펀드의 수익률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주펀드 중 최근 1년 수익률이 가장 우수했던 우리CS자산운용의 '프런티어배당한아름주식ClassC1'은 편입비율이 높은 종목 중에 KT&G, SK텔레콤, KT 같은 경기방어주가 상위에 포진해 있었다.

# 외국인 매도 vs 프로그램 매수 '氣싸움'

## 이달 매매패턴 엇갈린 4일중 이틀씩 상승·하락·내일 옵션만기일이 변수

이달 들어 반등장에서 외국인 매도와 프로그램 매수 간 기 싸움이 치열하다. 기관투자자의 주식 매수 여력이 떨어져 프로그램(차익) 매수가 풀림 없이 매물을 내놓는 외국인에 유일하게 맞서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차익 프로그램 매매는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현물(주식)을 사들인 후 현물과 선물가격 차익인 시장 베이스가 축소될 경우 반대매매(선물 매수·현물 매도)를 통해 무위험 수익을 챙기는 거래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13일 옵션 만기일에 일정 부분의 프로그램 차익거래 청산이 예상되는 데다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매수 규모도 크지 않아 앞으로 외국인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일 증시에서는 외국인 매도 물량이 오후 들어 늘어나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압도해 코스피지수가 23.73포인트 떨어진 1128.73으로 마감했다. 중국과 홍콩 증시가 오후 들어 내림세로 반전한 것도 장세를 위축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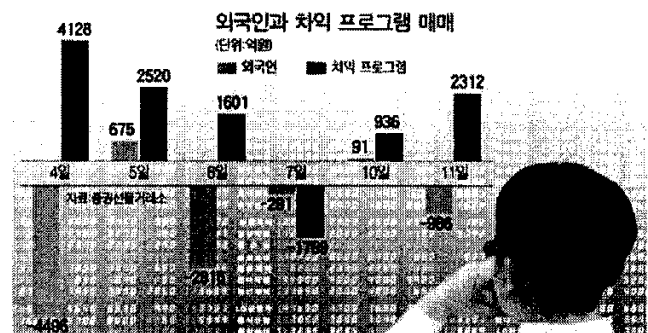
코스피지수는 개장 초 40포인트 가까이 밀리며 1110선이 무너질 위기로 몰리다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구원군'으로 나서면서 한때 상승

세로 반전하기도 했으나 외국인 매물이 늘어나면서 3일 만에 하락했다. 외국인은 1000억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차익 프로그램 순매수는 2312억 원에 달한 반면 선물과 무관한 비차익 거래는 163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로써 매수차익거래 잔액은 7조5000억원을 넘어 지난달 22일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과 증권사가 선물을 사들이면서 시장 베이스를 1 이상으로 벌려 차익 프로그램이 들어왔지만 외국인 매물에 밀렸다"고 설명했다.

이날처럼 외국인과 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극명히 엇갈린 적은 이달 들어 7거래일 중 4일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틀은 외국인 매물에 못 건져 지수가 하락한 반면 나머지 이틀은 프로그램 덕분에 상승했다. 외국인 순매수가 91억원에 그치며 시장을 관망한 지난 10일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지수 상승폭을 키웠다.

최 연구원은 "코스피지수 1100선 위에서는 연기금의 매매가 크게 줄어들며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심상범 대우증권 수석 연구원은 "최근 유입된 차익 순매수는 합성선물(콜옵션 매도+풋옵션 매수)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이번 만기일에 청산될 것"이라며 "오늘처럼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 프로그램 매수가 끝까지 막아내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도 "과거 사례를 볼 때 옵션 만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유입된 차익 순매수는 대부분 만기일에 청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2000억원 정도는 만기일에 청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 베이스가 고평가됨을 이어간다고 해도 추가로 유입될 차익 매수 여력은 크지 않다는 지적

이다. 심 수석 연구원은 "차익 프로그램 순매수 누적 추이를 통해 추정해 보면 2000억원 정도만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옵션 만기일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문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만기일에도 차익 매도와 비차익 매수가 맞서는 수급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말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아져 비차익 매수가 유입되면서 수급 부담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도 "올 예상 배당수익률은 2.2% 정도로 작년보다 0.7%포인트 높다"며 "인덱스펀드나 배당펀드 등에서 연말 배당을 노린 비차익 매수가 유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경현 기자 ceoseo@hankyung.com

# 한국 증시, 중국에 웃고 미국에 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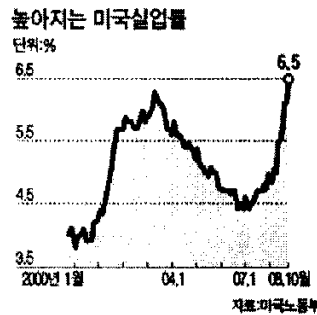
## 서킷시티 파산에 IT 관련주 줄줄이 급락 전날엔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급등

한국 증시가 미국·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 하루 중국 눈치를 살피고 나면 다음날은 미국발 뉴스에 주가가 출렁인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3.73포인트(2.06%) 떨어진 1128.73으로 밀렸다. 미국 2위 가전 유통업체 서킷시티의 파산보호 신청이 악재였다. 전날 중국 정부의 4조 위안(약 775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걸 다 반납하고도 더 떨어졌다.

◆미국 악재에 떠는 IT주=서킷시티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국내 업체가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1억1000만 달러와 4100만 달러 규모의 매출채권을 갖고 있지만 수출보험에 들어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 KB투자증권 정성호 수석연구원은 "국내 업체가 미리 쌓아둔 충당금까지 감안하면 서킷시티가 파산할 경우 외려 현금

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삼성전자는 0.8% 하락으로 그나마 선방했지만 LG전자는 7% 가까이 빠졌다. 하이닉스(-8.5%)·LG디스플레이(-6.5%) 같은 다른 정보기술(IT)주도 급락을 면치 못했다. 경기에 민감한 IT업종은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돌아서기 어렵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률은 5.3%로 전분기(10.4%)에 비해 거의 반토막 났다. LG전자도 6.7%에서 4.8%로 떨어졌다. 문제는 더 나빠질 게 거의 확실하다는 점이다. 외명몰 요구한 한 애플 리스트는 "미국 경제 둔화로 IT 제품 수출 전망이 나빠지면서 투자자들이 1등 기업인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던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수혜 가능성=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전날 급등했던 철강·해운·조선주는 11일 일



제히 급락했다. 특히 해운주는 한진해운이 3분기 28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발표하며 하한가로 추락했고, 대한해운도 13% 넘게 빠졌다. LIG투자증권 김현 선임연구원은 "금융위기로 세계 주요 은행이 신용장 개설을 꺼리는 게 해운업의 가장 큰 문제"라며 "중국 부양책만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원자재를 실어나르는 벌크선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운임지수(BDI)는 10일(현지시간) 820까지 떨어져 올해 5월 고점에 비해 무려 98%가 빠졌다. 배로 물건을 나르는 해운업이 안 좋



다. 김현 연구원은 "조선 업황이 회복하려면 신규 발주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되려 발주 취소가 잇따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강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우리투자증권 이창목 연구위원은 "국내 철강 업체는 수출 비중이 낮아 직접 혜택은 보기 어렵다"며 "세계 경기가 나아져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기계 업종은 직접 수혜가 가능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관련주의 전반적인 약세에도 이날 0.7% 올랐다. 김선하기자 odinelec@joongang.co.kr

파이낸셜  
뉴스

2008년 11월 12일 수요일 030면

## 증시 변동성 키운계 ELS 급감 탓?

### 10월 발행규모 3000억... 물량 매도 전략 취해

최근 증시가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 모두 가격 변동폭이 매우 커진 것은 주가연계증권(ELS)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증시침체에 따라 ELS 발행규모가 급격히 축소된 것이 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ELS 발행규모가 지금보다 증가하지 않을 경우 증시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ELS 상품 대부분이 손실기간인 '녹인(Knock-in)'에 진입해 주가하락시 보유 물량을 대거 쏟아내며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자랑하던 ELS의 매력이크

게 떨어져 있다.

지난 10월 ELS 발행규모는 3000억 원 수준으로 5월까지 월평균 2조원대를 유지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발행규모가 3조6000억원대로 급격히 확대됐던 ELS는 이후 9월 1조원, 10월 3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

이처럼 ELS발행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주가하락이 지속되면서 ELS가 손실기간에 접어들어 운용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ELS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수익을 보장을 위해 주가 하락시 추가 매수포지션을

취하고 상승할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갖는 '롱 감마(long gamma)' 구조로 형성돼 있다.

하지만 최근 지수급락으로 녹인이 발생하면서 거꾸로 주가가 상승하면 추가로 매수를 하고 주가하락시에는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쇼트 감마(short gamma)' 전략을 취함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평상시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신증권 이승재 연구원은 "과거에는 주식워런트증권(ELW)이 쇼트 감마 포지션을 갖고 ELS는 롱감마 포지션을 갖고 있어 서로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ELS마저 쇼트감마 포지션을 취함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태경기자

明

·중국이 4조위안(78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2010년까지 인프라 확충·1200억위안 상당의 감세 등 4조위안 활용  
·베이징 등 12개 도시에서 1조5천억위안에 재정투자 계획 등 투자규모 10조위안 상회

중국발 호재

## ‘샌드위치’ 신세 국내증시 어디로

당분간 박스권 유지... 저가 매수 전략을

증시가 혼조세를 띠고 있다. 중국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추가 반등을 시도했지만 미국 기업들의 줄도산 위기가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의 호재와 미국의 악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11일 코스피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전일보다 2.06% 하락한 1128.73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1114까지 하락했다가 1160선까지 오르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 ■미국발 악재와 중국발 호재

중국은 전일 4조위안(약 78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관련 업종에 대한 수출주 비중이 높은 한국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 기대감이 몰렸다.

지난 10일 코스피지수는 피치사

가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다는 소식에도 중국 관련주 급등에 상승 마감했다. 하지만 이날 미국 기업들의 위기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는 또다시 흔들렸다.

미국 2위 가전 유통업체인 서킷 시티가 월마트 등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파산을 신청했고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가사회(FRB)가 AIG에 1500억달러를 투입키로 하는 등 구제금융 규모 확대를 발표하며 그동안의 공적자금 투입이 부족했음을 드러냈다. 3·4분기 AIG는 245억달러 순손실을 내며 사상 최대 분기손실을 기록했다.

패니매 역시 3·4분기 200억달러 순손실을 기록, 사상 최대 분기 손실을 내며 위기감을 키웠다.

메리츠증권 조성준 연구원은 “지속적인 미국 기업들의 부도위험 확산과 금융기관들에 대한 미국 재무부와 FRB의 추가적인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투자심리의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 ■한국증시 어디로 갈까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추가 경기 부양책이다.

기움증권 전지원 연구원은 “미국 기업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만큼 앞으로 강력한 정책 지원이 나올 것이라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또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 정책 공조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인 만큼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증권 김성봉 연구원은 “당장 경기 침체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부정적인 뉴스가 반복되고 있어 시장은 전반적으로 높은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부증권 강성원 연구원은 “또 코스피지수가 저점대비 20% 상승한 가운데 종목별로는 50% 이상 급등한 기업도 나타나고 있어 차익 실현 매물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당분간 박스권 내 움직임을 예상한 기술적 매매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강 연구원은 “단기 관점에서는 지수 상승시 포지션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박스권 하단에서 저가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seiae@fnnews.com||이세경기자

미국발 악재

·미국 2위 가전 유통업체 서킷 시티가 파산 신청  
·서부보험·AIG가 245억·250억달러 손실  
·패니매 역시 3·4분기 200억달러 순손실 기록, 사상 최대 분기 손실

暗



# 10년만의 기회? 거액 자산가 돌아왔다

#사례 1. 이민주 씨앤엠 전 회장은 한국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가 갖고 있는 현금만 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보유하고 있던 종합유선방송회사인 씨앤엠 지분을 작년 MBK파트너스-맥쿼리 등의 사모펀드에 1조4600억원에 팔았다. 그런 그가 주식시장에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모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이 회장의 자금을 운용하는 에이티넷파트너스가 최근 주요 증권사에서 정기적으로 브리핑받으며 투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씨앤엠 매각 뒤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의 꿈은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며 "최근 주가 하락에 관심을 갖

고 장기투자를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례 2. 박건영 트러스폰자산운용 대표(주식운용본부장)는 최근 시장을 관찰하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관이 선호하는 우량주도 아니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안정성 있는 종목도 아닌데 장중 주가가 상한가로 치닫는 현상이 자주 벌어진 것. 주식 영업을 하는 증권사에 물어보니 "최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설명회를 많이 나간다"는 말을 들었다. 박 대표는 "10년에 한두 번 정도 주식이 저평가된 기회를 노려서 들어가는 '스마트머니'가 증시에 유입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 주머니 푼돈이 아니라 뭉치돈이다. 이들은 사분오열돼 질서가 정연하지 않던 기존 '개미투자자'와 성격 자체가 다르다.

동양증권증권의 한 프라이빗뱅크(PB)는 "이들은 언제든지 5억원 이상의 현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로 50억~100억원가량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면 주식을 왕창 끌어모았다가 오르면 파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은 67.19%를 기록했다. 올 1월의 47%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외국인과 국내 기관투자자가 빠져나간 사이 개인

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판이 된 것이다. 개인 고객예탁금은 7일 현재 10조9679억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1일의 9조원에 비해 한 달 사이 1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계좌도 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많은 키움증권의 주식 위탁계좌는 10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097건이 새로 개설됐다. 이달에는 10일까지 하루 평균 1755건의 계좌가 신설됐다.

이렇게 늘어난 개인 자금은 대부분 우량주를 겨냥하고 있다. 키움증권을 통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거래한 투자자의 패턴을 크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구분해 봤다. 9월 거래 종목 중 우량주가 몰려 있는 코스피 종목 거래는 60%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나 증시가 반 토막 난 10월 31일 코스피 시장 종목 매매 비율이 86.8%를 기록하는 등 최근에는 개

인 거래 중 80% 안팎이 유가증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박희운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거액 개인자산가들이 과도하게 떨어진 우량주 시장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스마트머니'가 갖는 성격을 알아야 향후 주식시장을 알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스마트머니가 증시에 유입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논리를 믿지 말라고 조언한

실질 고객예탁금 추이

\*실질고객예탁금=고객예탁금-미수금-신용잔고-개인예도결제



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들의 단타 성향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희운 센터장은 "개인 비중이 늘어나면 지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총알(고객예탁금)'이 감소하거나 악재성 이슈가 터지면 지금같이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 여력이 없을 때엔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악순환이 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신현규·이소아·김대원·전범주 기자

**용어** 스마트머니: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 들어갔다가 일정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곧장 털고 나오는 자금.

## □ 증권사 7~9월 실적 분석해보니

## 삼성·미래에셋 상대적으로 양호

증권업종지수가 연초 대비 55% 떨어졌다. 특히 증권주는 7~9월 주가하락률이 컸다. 하지만 이런 시기가 증권주에 투자하기 좋은 때라는 역발상도 팽배하다. 실제로 삼성증권은 최근 3개월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주가수익률이 42.1%포인트나 됐다. 전문가들은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수익원이 다양한 증권사들이 전망도 밝다고 조언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7개 증권사 상황을 점검한 결과 위기에 증권사들 경영 상태는 승자와 패자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 ◆재무구조 우량하고 수익원 다양한 삼성증권

증권사들 승패는 그동안 각사가 투자를 집행하면서 점검해 온 리스크 관리에서 판가름이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증권은 그동안 자산관리 위주 영업에 치중해 온 보수적인 영업 방식이 오히려 덕을 본 사례. 다른 회사가 자기자본의 80%가량 되는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유동화어음(ABCP) 등에 투자해 온 반면 이 회사는 부동산 대출이 자기자본 대비 4.67%에 불과하다.

게다가 삼성증권은 수익원 또한 다양했다. 주식매매영업(브로커리지), 펀드 판매, 이자수익, 자기자본매매, IB 등 영업 부문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춰 왔던 것. 최두남 푸르덴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익 변동성이 낮다"며 "영업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 4580억원, 영업이익 291억원, 당기순이익 297억원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익은 비록 축소됐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평균치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채권 판매에서 성과를 거두는 등 자산관리 중심 영업전

증권사별 7~9월 실적 (단위=억원·%)

| 구분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
|---------|--------------|-------------|-------------|
| 삼성증권    | 4,580(-18.3) | 291(-69)    | 297(-85.2)  |
| 우리투자증권  | 15,273(6)    | 285(-71.9)  | 249(-68)    |
| 미래에셋증권  | 5,382(15.36) | 295(-62.95) | 179(-70.02) |
| 기원증권    | 1,191(21.77) | 163(-18.65) | 103(-29.46) |
| 협양증권    | 307(-8.7)    | 18(-72.5)   | 19(-70.5)   |
| KTB투자증권 | 153(-36.84)  | -79(과지전용)   | -120(과지전용)  |
| 대우증권    | 12,011(74)   | -261(과지전용)  | -179(과지전용)  |

※ 발표 안한 전년 동기 대비,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메릴린치증권은 지난 10일 "미래에셋증권은 중시 약제기에서도 한국 증권주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종목"이라며 목표주가를 15만5000원으로 유지했다. 메릴린치는 "미래에셋증권의 2분기(7~9월) 순이익이 17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0%가량 줄었지만 주식 매매 수수료는 4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밖에 줄지 않았다"며 "증시 부진과 펀드 판매 감소로 인한 영향도 한국 증권사 중에서 가장 작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적립식 펀드 점유율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분기 브로커리지시장 점유율도 8.6%로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성장했다"고 말했다.

## ◆다른 증권사 관심은 부실 노출

최근 증권주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부실에 대한 노출 정도였다. 푸르덴셜투자증권,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들이 각사에 문의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대출 및 투자 정도가 많은 곳은 동양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물론 모든 부동산 관련 투자가 손실을 기록할 리는 없지만 투자자 처지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신현규·이소아 기자

략이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이 회사의 자체적인 평가다.

## ◆시장 회복되면 가장 큰 수혜는 미래에셋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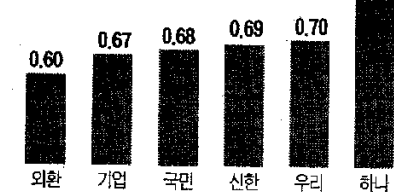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은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내 주식형 펀드 시장 중 35%를 차지하는 만큼 펀드시장과 기업 실적이 궤를 같이 한다. 실제 중시가 급락한 이번 2분기(7~9월)에는 펀드 판매 둔화 등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63%와 70% 감소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는 기업 펀드멘털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시장이 회복되면 가장 큰 수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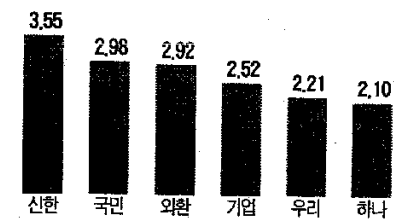
# 환경악화속 신한·국민銀 수익성 그나마 선방

## 3분기 은행 실적 분석...외환銀 연체율 낮아

주요은행 연체율 비교  
(단위:%)



NIM(순이자마진) 비교  
(단위:%)



ROA · ROE 비교 (단위:%)

|                       |       |       |      |       |      |      |
|-----------------------|-------|-------|------|-------|------|------|
| ROA<br>(총자산이익률)       | 국민    | 신한    | 외환   | 기업    | 우리   | 하나   |
|                       | 1.0   | 1.0   | 0.78 | 0.6   | 0.45 |      |
| ROE<br>(자기자본<br>순이익률) | 국민    | 기업    | 신한   | 외환    | 우리   | 하나   |
|                       | 15.65 | 14.63 | 14.4 | 13.52 | 9.95 | 7.81 |

자료: 각 은행, 3분기 누적 기준

불황과 금융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은행 경영실적의 차별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무리한 자산 확충으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던 곳은 경영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반면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해 온 은행들은 안정적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수익성·건전성은 신한·국민 우수  
11일 주요 시중은행들이 발표한 3분기 경영실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수익성과 자본건전성 측면에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신한은행은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톱 수준인 3% 중반을 유지했다. 국민은행은 NIM에서 2.98%를 기록, 3%대에 거의 근접했다.

우수 금융회사의 바로미터가 되는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에선 국민은행이 1.0%와 15%로 우수한 성적을 냈다.

신한은행도 1.0%의 ROA와 14% 중반

대의 ROE를 기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선제적 자본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 악화에 대비, 외형 확대를 자제하면서 위험자산을 축소해왔다”고 말했다.

◆여신위험 관리 외환은행이 잘해 반면 신한은행은 연체율과 고정이자 여신비율의 경우 시중은행 평균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와 연체율을 합산할 경우 위험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은행도 이 두 부문에서 평균 수준에 그쳤다.

외환은행은 고정이자 여신비율과 연체율이 가장 낮아 위험관리에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외환은행은 ROA도 1.0%대를 유지, 리처드 웨커 은행장을 비롯한 외국 출신 경영진이 무리한 영업이나 확장 경영을 자제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은행은 연체율이 낮지만 고정이자 여신 비율은 유일하게 1%를 초과했다. 은행 특성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 데 따른 결과로 해

석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대기업 여신비중이 가장 높은데도 고정이자 여신비율은 0.75%로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3분기 들어 ROA와 ROE가 급락하는 등 무리한 자산 확충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전체적으로 올들어 9월까지 국내 은행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8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36.2% 감소하는 등 이익창출 능력도 떨어지고 자산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며 “다만 추가 부실위험에 대비, 총당금 적립을 늘리는 등 위기상황에 잘 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시중은행장은 “은행들이 2000년 이후 호황기를 누리면서 구사해온 확장전략의 덩가리를 치르고 있다”며 “불황이 심화될 수도록 각 은행의 경쟁력 격차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 개인보다 못한 자산운용사

## 블리스운용 투자한 회사에서 돈때일 가능성

펀드가 투자한 의류유통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반축을 사고 있다.

블리스자산운용의 '블리스아울렛 특별자산1호'가 투자한 기업과 소송에 휘말리면서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이 펀드는 지난해 9월에 설정됐으며 20여 명의 개인과 법인투자자들이 참여해 총 50억원의 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펀드가 투자했던 업체와 소송이 9월부터 시작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펀드 수익구조는 간단하다.

의류 재고처리 업체에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 갖는 구조다. 문제는 업체 사장이 1차 투자자인 20억원가량을 불법 유용하면서 발생했다.

블리스자산운용 측은 "올해 1월 말에 이상 징후를 발견해 협의를 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9월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만기 전에 원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운용사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만기(2009년 1월) 이전에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일부 투자자들은 "전문 운용사라

특별자산펀드 수익률

(단위=억원·%)

| 펀드               | 설정액   | 1개월   | 3개월   | 6개월   | 설정 후   |
|------------------|-------|-------|-------|-------|--------|
| 하나UBS바어킹선박특별자산 2 | 180   | 0.64  | 1.90  | 3.81  | 10.88  |
| 산은상생협력지원특별자산 1   | 104   | -0.01 | -0.03 | -0.05 | -0.11  |
| 산은K-Power특별자산 1  | 85    | 0.68  | 2.01  | 4.04  | 14.51  |
| 산은성장기업특별자산 1     | 140   | 0.60  | 1.83  | 3.72  | 16.58  |
| 산은성장기업특별자산 2     | 100   | 0.02  | 0.05  | 0.09  | -20.66 |
| 마이애셋팩트소평순한한우특별자산 | 65    | 0.61  | 1.77  | 3.56  | 8.02   |
| 한국베트남15-1유전해외자원  | 1,166 | -     | 5.84  | 3.99  | 7.54   |
| 특별자산 유형평균        |       | -0.13 | 0.84  | 2.20  |        |

\*11월 기준. 자료=제로인

면서 개인투자자만도 못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펀드가 운용 성과로 인해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있어도 펀드가 소송을 제기하는 예는 드물다"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운용사가 투자기업 하나 제대로 못 골랐다는 얘기다.

이 펀드와 같은 상품은 특별자산펀드로 불리며 통상적으로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실제 개발사업 등에 투자한다.

쉽게 생각하면 와인 등 실체가 있는 대상에 투자하는 신품펀드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와 비슷하다.

이들 펀드는 주식시장 영향이 작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

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에게서 인기를 끌기도 했다.

대부분 사모 형태로 모집이 이뤄져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특별자산펀드·신품펀드는 고수익에 따른 반대급부로 고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5월에는 유전자산업운용이 운용 중이던 '한일드림모아3호 부동산투자신탁10호'가 우정건설 PF 자금에 참여했다가 우정건설이 부도나기도 했다. 당시 투자에 나섰던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펀드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화 기자

# 개미들이 증시 이끈다

연중 최저점 이후 개인 매매비중 60%대 상승

기관·외국인은 20~30%대→10%대로 떨어져

급등락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 비중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이 떠나고 기관들이 멈추는 와중에 시장을 떠났던 개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자료를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은 10일 현재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67.19%로 나타났다. 평균 매매 비중은 투자 주체들의 매매금액(매수+매도액)을 유가증권시장의 총 거래대금으로 나눠 산출한다.

개인들의 매매 비중은 줄곧 40%대에 머물다 지난달 24일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저점(938.75)을 찍을 때 52%대로 올라선 뒤 꾸준히 상승해 10월30일부터는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 비중도 평균 매매 비중의 증가 추세와 궤를 같이해 지난 10일 각각 65.79%와 68.63%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20~30%

대를 유지하던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의 매매 비중은 최근 10%대로 떨어졌다. 10일 기준으로 외국인은 12.84%, 기관투자자는 17.90%를 나타냈다.

고객예탁금의 증가 추세를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 확대와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고객예탁금은 7일 현재 10조9679억원으로 열흘째 증가했다. 8조~9조원을 넘나들던 것이 10월31일 1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11조원을 넘보게 됐다.

저가에 주식을 사들이는 이른바 '스마트 머니'의 유입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량이 폭 떨어진 마당이라 당연히 개인의 매매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일부 저가 매수세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들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한겨레신문

## 실물펀드 횡령 등 빈발 사고나도 파악 힘들어

의류 아울렛 사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는 실물펀드에서 자금 운용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펀드는 주식형펀드와 달리 투자 자산의 시가 평가가 어렵고 사업 과정을 확인하기 힘들어 펀드에 문제가 생겨도 투자자들은 파악하기 어렵다.

1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블리스자산운용이 작년 9월에 사모로 50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설립한 '블리스아울렛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에서 전체 투자금의 40%에 육박하는 18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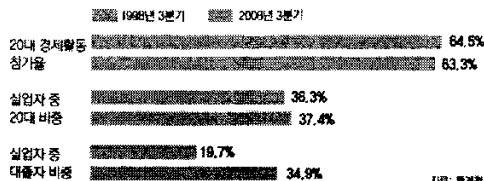
M자산운용이 지난해 내놓은 부동산 개발펀드도 사업 시행사가 펀드 자산을 횡령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다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에 고발됐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투자 과정이 복잡한 실물펀드들은 운용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철저한 실사를 통해 자금이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모두 서류만으로 자금을 관리했다"며 "자금 유용사고가 발생하면 에스스로(투자금 보전)제도 등을 곧바로 도입해 추가 손실을 막아야 하는데도 시간만 끌다 손실 규모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hu@hankyung.com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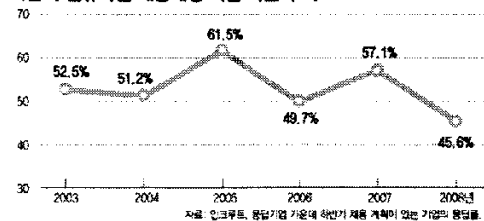
# “서너달 뒤엔 감원 태풍” 금융권 벌써 수백명씩 희망퇴직

위원회 당시(1998년)와 최근 청년실업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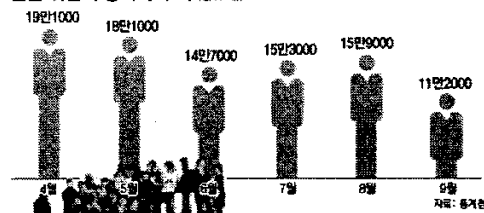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하반기 신규사원 채용예정 기업 비율 추이



자료: 인크루트, 문당기업 가운데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의 응답률

월별 취업자 증가폭 추이 (단위: 명)



자료: 통계청

## 〈下〉정규직도 신규채용도 안전지대가 없다

비정규직에게 해고대란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규직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근로법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은행, 증권계에는 이미 감원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20만 채 이상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어 일부 회사의 부도설까지 나오는 등 주택 건설업계도 인력 구조조정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이 모두 얼어붙으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가릴 것 없이 위기가 이후 가장 매서운 해고 한파가 불어닥칠 조짐이다. 내년 경영계획을 마무리 손질하고 있는 기업들은 금융위기 이전에 발표한 채용 계획을 취소하거나 유보하는 등 신규 채용시장도 줄어들고 있다.

### ◆금융권에는 이미 해고 시작

지난해 7월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2,000 선을 돌파하는 등 유례없는 활황을 맞았던 증권업계는 이제 인력 감원의 진원지로 변했다.

하나금융지주는 12월 하나IB증권과의 합병을 앞두고 12월부터 100~150명 규모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노조와 최종 합의했다. 현직은 희망퇴직이지만 대상이 되는 장기 근속자들은 이미 인사 담당 부서에서 퇴직 권고 또는 음퇴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용상 구조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다른 증권사들은 아직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인력 감축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대부분의 증권사가 신규 채용을 사실상 중단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아직까지는 증권사들이 인력 감축에 대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지만 요즘 같

게는 계속 내부 근무인원을 줄일 방향”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신한은행은 지점 100여 곳을 통폐합할 계획이며 농협중앙회는 본부 인원 20%를 다른 지점이나 사업부서로 옮길도복 했다.

### ◆건설 자동차 업계도 감원 바람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도 조만간 감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내수 악화에 건설-자동차업계 기술직까지 이직 내몰려

“구조조정 한파 이미 시작… 눈치보고 있는 업체 더 많아”

기업 45%만 “올해 채용계획 있다”… 그나마 취소 잇따라

은 침체 상황이 3, 4개월만 더 지속되면 증권업계에 감원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은행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본부 인원 143명을 지점으로 이동시켰고 193명으로 부터 희망퇴직 신청서를 받았다. 이 은행 관계자는 “올해 들어 본부 인원이 280여 명 줄었으며 앞으로도

대형 건설사인 A사는 기존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총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실시해도 퇴직금 등이 부담될까 걱정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B사는 최근 토목사업부에서 잔뼈가 굵은 기술직 직원을 영업파트로 발령 내는 방법으로 이직을 종용

하고 있다.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도 힘들어지자 전공 분야가 아닌 곳으로 발령을 내거나 승진을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감원을 유도하는 것.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된 자동차 관련업계도 같은 처지다. 쌍용자동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규직원 및 사내 협력업체 직원 350명에 대한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으

### ◆신규 채용 시장은 공황

기존 인력도 줄이는 분위기에서 신규 채용이 활발할 리 없다. 채용정보업체 인크루트가 올해 9월 상장회사들 대상으로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안에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45.6%)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견 기업은 올해 신규 채용을 10.8%, 중소기업은 36.0%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취소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2003년부터 해마다 신입사원을 뽑아 온 GM대우는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취소했다. 지난해 85명의 신입사원을 뽑았던 한국타이어도 올 하반기 채용을 유보한 상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 사업 계획을 확정짓지 못해 올해 하반기 채용 규모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 같은 인력 시장 불황 속에 9월 신규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만2000명 줄어 7개월 연속 정부 목표치인 20만 명에 못 미쳤고, 12월 발표되는 10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은 금융위기 상황이 반영돼 10만 명을 밑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정봉 기자 cec@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홍수용 기자 hlgman@donga.com

## 그래도 지금은 장기투자할 때다

“지금이라도 있는 주식을 모두 팔고 현금화해야 하는 건가요? 펀드도 솔직히 모두 정리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손실 폭이 큰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주식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더 마음이 아프다.

지수 2000선 돌파의 환호성 뒤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금융위기, 실물경기 둔화로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

저금리 아래에서 과도한 대출로 인해 투기로까지 발전했던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하락이 나타나자 서로 먼저 고장난 차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아우성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채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급기야 일부 투자은행이 파산과 함께 돈줄이 막히고 말았다.

주식시장에서 강세론자의 의견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모든 사람이 추가적인 하락 폭·추가 부실이 얼마나 늘어날지, 반등 때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모두 과욕을 갖고 주식투자에 임했던 상황에서 되돌아온 부메랑의 상처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만큼 과도한 공포심에 그동안 견뎌온 자신의 인내심을 너무나 싼값에 넘겨버리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가치투자 달인 워런 버핏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것이라며 장기투자에 나서라고 말한다. 또 정부도 3년 이상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간단하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원칙인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비용분산 효과(Cost Averaging)다. ‘주식시장의 고점·저점은 신(神)도 모른다’고 한다. 적립식 펀드를 통한 꾸준한 장기 분산 투자로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 범위 안에서 주식 투자 한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둘째, 장기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다. 경기변동 과정에서 일시적인 확장기·둔화기는



장인환  
KTB자산운용 사장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세계 경기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왔다.

사실 현 상황에서 성장성을 믿고 투자에 나서기는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엔 주가순자산비율(PBR)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다. PBR 1

배 이하의 기업의 청산가치 이하로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즉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공포보다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버틴다면 투자의 과실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은 기존 투자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 손실을 확정하고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모두 위기 국면 앞에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위험을 감수하는 투자가 맞는 방향인지 의심스럽다.

넷째,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투자세대(40~59세) 비중은 전체 인구 중 33%로 이를 근거로 전망해 보면 2015년까지 주식시장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투자 성격이 강한 각종 연금·변액보험의 비중 증가는 중장기적 주식수요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

장기투자의 방향은 추세이고 대체다. 보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창출이 우선적인 명제일 것이다.

변동성이 심한 현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의 분산과 위험 수준 등이 적정한지 차분히 점검해 알뜰하게 모아왔던 소중한 재산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향후 2~3년의 자본시장 명제는 ‘바이코리아 어게인(Buy Korea Again)’이었으면 한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갈 대한민국의 성장성과 역동성을 믿기 때문이다.

# “글로벌 증시 바닥 근접...가치주 투자를”

아제이 카푸 미래에셋 글로벌리서치 헤드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리기보다 장기 수익률을 노린 가치주에 투자하라.” 아제이 카푸 미래에셋 글로벌 리서치센터 수석 헤드는 11일 미래에셋 투자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주장했다.

카푸 리서치헤드는 “현재 시장은 지난해 금융 쇼크에서 벗어나 바닥에 근접해 있다”면서 “이미 한 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팔기보다는 기회를 노려볼 때”라고 말했다. 즉 시장 불안감이 정점에서 가라앉은 만큼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것은 가치주라는 얘기다. 가치주 가운데서는 현금 흐름이 좋거나 변동성이 작은 종목,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눈여겨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시장 상황에서 고려할 만한 10가지 투자 주제에 대해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소득 불균

형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앞으로는 중산층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면서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보다는 월마트 등 기업에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또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부각되면서 원자재 시장이 강세를 보였는데 2~3년 뒤에는 디플레이션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볼 것을 주문했다.

자산별 분배 전략에 있어서는 주식이 채권보다 매력적인 국면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세계 100대 헤지펀드 중 60곳에 대해 투자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투자리서치사 게이브 칼의 루이 빈슨 최고경영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초청연설에서 “글로벌



시장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자산가격의 무차별적인 하락이 야기됐다”면서 “하지만 각국 정책 공조로 유동성 압박이 해소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증시를 12개월 이상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더 (상승)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증시 상승률은 선진국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유럽에 비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신흥시장에서는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일부 국가를 추천 지역으로 꼽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앞으로 홍콩에 있는 글로벌리서치센터와 한국 소재 코리아리서치센터 공조를 통해 새로운 투자 견해를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설진훈·이재화 기자

朝鮮日報

2008년 11월 12일 수요일  
B04면

## 이트레이드증권 전산 오류로 큰 혼란

이트레이드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전산오류가 발생해 일부 고객들이 정상적인 주문을 내지 못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11일 이트레이드증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이 회사 HTS상에서 일부 고객의 고객예탁금이 잘못 집계되고 보유 주식 관련 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정상 주문을 내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은 고객들이 크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고객예탁금과 주식평가액을 합쳐 약 330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 회사 고객 이모씨는 “고객예탁금에서 1500만원 정도가 사라지고 7개 보유주식 중 5개가 화면에서 사라졌다”며 “회사에 전화를 해도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끊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트레이드증권 관계자는 “코스콤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고객들의 실제 주식보유액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재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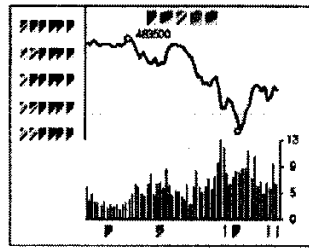
## 포스코 외화채권 200억엔 발행

포스코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200억엔 규모 외화표시 변동금리 부공모사채 발행에 성공했다.

포스코는 11일 외화조달이 어려운 금융환경에서 추진했던 10억달러 상당의 해외채권 발행계획 중에서 1차로 200억엔 규모 외화표시 공모사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공모사채는 만기 3년에, 금리는 일본 은행 간 금리(Yen Tibor)에 가산금리 2.6%포인트를 얹어주는 조건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에 조달된 자금은 브라질 철광석 광산회사인 나



미사(Namisa) 인수를 위한 자금과 수입원료 구매자금 결제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 발행계획 중 나머지 8억달러는 글로벌 달러채권으로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성훈 기자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확인 루머 근원지?



## ‘미네르바’ 정체는 50대 증권맨

다음 아고라 경제논객  
정부서 신원 확인한듯

철학자 헤겔은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고 했다. 철학자의 고민을 담은 명제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 문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미네르바(로마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를 괴담 유포자로 고발해야 할지 아니면 단순한 사이버상의 논쟁으로 넘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런 고민을 아는지 ‘미네르바’는 최근 활동을 접고 황혼 속에 몸을 감추었다.

‘미네르바’는 인터넷 공간에서 경제 관련 글을 쓰는 네티즌의 필명이다. 미네르바가 유명해진 것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불똥이 한국에 옮겨붙을 것’을 예측하면서부터다. 이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했고 정부의 잘못된 경제 예측과 처방 등을 비판하며 유명인이 됐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미네르바가 유명해지면서 그의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크게 확산돼 경제적인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또 미네르바가 글을 쓰면서 잘못된 통계를 인용하거나 근거 없이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달 26일 ‘코스피 1차 저점은 820, 2차 저점은 500’이라고 주장하는 등 미확인 루머 전원이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 전여욱 의원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미리 정보를 알고 재산을 불렀다는 식으로 비판하면서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보당국은 일단 미네르바의 신원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그는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증권사에 다녔고 또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남자”로 파악하고 있다.

그의 신상을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당국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미네르바에게 정확한 통계자료와 정부 입장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강 누구인지는 알아봤다”고 밝혔다.

그가 활동을 중단하자 정부와 청와대는 일단 이 문제에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가 활동을 재개하고 그 이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철 기자

# 은행 퇴직연금 횡포 심각

## 중기 상대 대출 조건으로 가입 강요

최근 모 증권사 주최로 열린 퇴직연금 관련 세미나. 한 중소기업의 노조위원장은 패널로 참석한 정부 관계자에게 “은행들이 대출 금리나 기한 등을 앞세워 다른 운용사로의 퇴직연금 가입을 막은 사실을 아느냐”며 대책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듣게 돼 놀랐다”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연금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 상대 부당 영업행위도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면서 각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금리 인하 및 수수료 인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데다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등 부당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운영사들에게 퇴직연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각 금융기관들의 과열 양상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은행들이 금리 인하나 수수료 인하 경쟁 외에도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찍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퇴직연금 관계자는 “실제 중소기업에 영업을 위해 방문해 보면 은행 눈치 보기 바쁘다”며 “찍기식 부당행위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자신에 맞는 퇴직연금의 특성과 상품 구조를 충분히 알지도 못한 채 주거래 은행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가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은 자금경색이 심각해 은행이 돈을 좀 죄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퇴직연금제를 주거래 은행으로 가입하면 각종 혜택을 준다고 말하면서 만일 다른 곳과 계약하면 앞으로 대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퇴직연금시장 선점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때 처음부터 단독사업자 자격을 포기하고 복수사업자로 제안을 하는 편이다. 은행권이 퇴직연금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편의상 1개의 사업자에 전담하는 것이 좋지만 중소기업과 주거래 은행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수사업자를 제안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결국 은행들의 이런 행태는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있는 증권사나 보험사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 [h18123@hnews.com](http://h18123@hnews.com) 노현섭기자

## 취재여록

## 소신있는 애널리스트 없나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10일(현지시간) 경기침체에 따른 타격으로 주가가 6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는 굴욕을 당했다. 증시에서는 GM은 이제 체면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말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이 회사 주가가 급락한 것은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보고서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 은행의 로드 라체만 애널리스트가 “GM이 파산을 모면하더라도 그와 다른 없는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며 매도의 견과 함께 향후 1년간 목표주가를 ‘0달러’로 제시했다.

이처럼 과격적인 도이체방크의 보고서는 주가가 40% 가까이 떨어지는 속에서도 매도의견조차 잘 안 보이는 국내 증시 관행의 문제점을 새삼 부각시키고 있다. 증권정보업체인 애프엔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은 1만4926건의 투자 의견 중 직접적으로 ‘매도’를 추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매도와 유사한 ‘비중축소’만 8건(0.05%)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한국엔 매도가 없다”는 자조섞인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내 증권사 한 리서치센터장은 “해당 기업과 투자자들 눈치를 보느라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 다른 애

널리스트는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면 해당기업 투자자들의 불평과 원성에 일을 못할 정도를 넘어서 때론 두려움을 느끼는 사례도 많다”고 털어놓았다.

최근에는 금융감독기관까지 말리고 나선 상황이다. 실제 한 증권사는 “금융위기로 민감한 시기에 그런 보고서를 왜 썼느냐?”는 압력성 문의를 받은 후 애널리스트들의 입단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의도 증권가 일각에서 ‘목표주가 0달러’에 대해 내심 부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애널리스트들에겐 정확한 기업가치 평가가 생명이자 최우선 과제라는 기본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진 상징적인 본보기이기 때문이다. 우리 증시와 투자문화가 한층 성숙해져 매도의견은 물론 목표주가로 ‘0’ 원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서정환 증권부 기자 [ceosep@hankyung.com](mailto:ceosep@hankyung.com)

## “한국 신용등급전망 하향 피치, 너무 피치 올렸다”

세계 3위권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 데 대해 증권업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간판 증권사인 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하며 제시한 논리들이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피치는 전날 한국에 대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제 부진, 대내적으로 은행 유동성 부족과 부실 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A+를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낮췄다.

금융시장 불안이나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향후 신용등급 자체를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우증권은 이날 ‘피치사(Fitch)가 피치(Pitch·속도)를 너무 올렸다’는 제목의 분석보고서에서 “3대 신용평가사 중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꼽히는 피치의 신용평가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것이어서 고려할 가치가 떨어진다”며 이번 전망 조정을 평가절하했다.

피치는 과거 한국이 환란을 겪을 때도 신용등급을 무려 12단계나 하향조정했으며 이후 신용등급을 높일 때는 무려 7단계나 올리며 다른 경쟁사에 비해 변동

성이 컸다는 점을 이 증권사는 부각시켰다.

이승우 대우증권 연구원은 “피치사 신용등급 결정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용평가사에서 상대적으로 마이너 업체라는 사실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피치사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고 시장이 급등한 점을 봐도 피치 평가가 잘못됐음을 알 수 있다고 대우증권은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피치의 국가등급 전망 하향 악재는 증시에서 2

~3일도 가지 않아 소멸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삼성증권도 이날 은행 유동성

“은행 유동성 문제는

미국·유럽이 더 심해”

삼성·대우증권 강력 비판

문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국 은행들을 문제 삼아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나 유럽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나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공급이 없다면 당장 연명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어야 하는 나라는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유럽”이라고 일갈했다. 삼성증권은 전 세계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는 데 한국만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된다고 문제 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설진훈 기자**

## 국내 증권사들 '피치 한국신용등급' 이례적 반박 왜?

한국을 대표하는 증권사들이 영국계 피치의 신용등급 전망 조정에 대해 공개 반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내렸다고 10일 발표하자 다음 날 일어난 일입니다.

피치는 "한국 은행권의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악화될 우려가 있고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특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글로벌 신용정책의 여파로 한국의 은행들이 국제시장에서 자금 회수를 당하면 외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지요.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국제

신용평가사보다 영향력이 몇 배는 더 강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회(FRB)와 통화스와프가 체결됐고 △달러 경색이 다소 완화돼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필요성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반박



### 경제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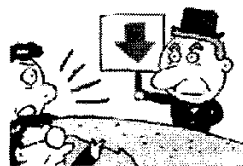
“美-유럽이 더 심각한데  
'부정적' 전망 납득 못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유동성 부족 문제는 중앙은행의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이 없다면 당장 연명하기도 어려운 유럽이나 미국의 금융기관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 그런 논리라면 향후 국가신용등급이 부정적일 수 있는 국가는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유럽이 아

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대우증권은 한 발 더 나아가 '피치의 신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4차례에 걸쳐 10단계 하



향조정하는 동안 피치는 12단계로 내리는 등 국가신용등급 조정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치의 결정에 대한 반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온 국민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한국 정부와 국민은 기본

이 몫을 상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경제는 냉철한 이성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피치가 지적했듯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은행 자산이 부실화할 수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나아가 개방화된 국제경제 환경에 처해 있는 한국의 처지에서 피치와 한국 증권사 측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은 물론, 어떤 반응이 상황 타개에 도움이 될지도 꼼꼼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태 훈

경제부 기자

jefflee@donga.com

## 한국경제

2008년 11월 12일 수요일  
A37면

◆조선일보▷기획팀장 高鍾元▷미디어전략팀장 方正梧▷마케팅전략팀장 孫權美▷CSI팀장 姜相大

## 한경 데스크

한 달 전쯤에 중년으로 여겨지는 독자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다. 코스피지수가 1400선 밑으로 내려오던 무렵이다. 그는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왜 ‘눈에 보이게’ 주식을 매수해 외국인의 매물을 받아주느냐”고 항의했다. “어차피 팔고나갈 외국인인데 차라리 주가가 떨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외화유출이라든 줄이는 길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지난달은 증시 사상 유례없는 공포의 시기였다. 주가는 3년여 만에 1000 밑으로 추락하고 일반투자자들은 현금을 확보하려고 보유주식을 서둘러 처분하는 등 시장이 거의 무너진 상태였다. 지난달 말에야 한·미 통화스와프(교환) 협정 체결로 일단 급한 불을 끄는데 성공해 증시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 손희식

증권부 차장



은 많은 헤지펀드들이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과 조세회피 지역의 매도만 5조원을 넘어 전체 외국인 한 달 매도규모(4조5281억원)를 웃돌고 있다. 헤지펀드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계 자금과 함께 국내 증시의 주요 매도세력이라는 얘기가.

더욱이 프랑스나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의 자금이 국내 주식을 사들

인 것과는 달리 이들 케이맨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자금은 오히려 매도규모를 늘리는 추세다.

헤지펀드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의 2~5배까지 과도하게 자금을 빌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런 헤지펀드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30%를 웃도는

## 증시, 연말이 두려운 이유

이처럼 증시가 요동을 쳤던 이면에는 끊임없는 외국인의 주식매도가 도사리고 있었다. 외국인은 빌려 팔았던 주식을 되사들이는 날도 더러 있었지만, 지난달에만 4조원 넘게 주식을 팔았다. 주가가 반등한 이달 들어서도 매물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을 제외하면 작년 6월부터 이달까지 18개월째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국내 주식을 계속 처분하는 외국인의 정체는 뭘까. 금융감독원에서 내놓는 국적별 외국인 매매동향을 보면 그 단초를 알 수 있다.

최근 자료인 지난 9월을 놓고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3조1487억원을 차지했다. 국내 주식을 팔아 본국의 유동성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눈에 띄는 것은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맨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의 매도규모가 각각 1조원을 넘는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

투자손실과 이에 따른 고객들의 잇따른 환매(펀드청산)요구 및 유동성 부족이 맞물리면서 자금마련이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문제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헤지펀드의 70% 정도는 매년 12월에 투자 펀드를 결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해외변수들이 국내 증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지금 일각에서 2차 쇼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연말까지 헤지펀드 환매 및 청산 매물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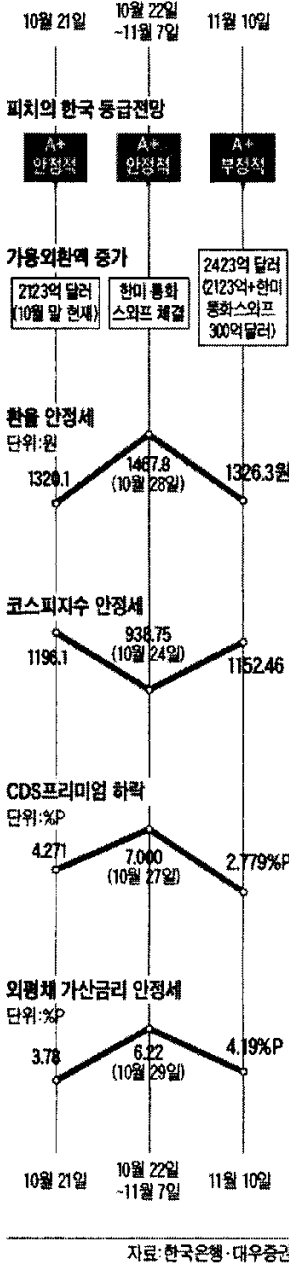
이처럼 거대한 매도세력이 자리잡고 있는 한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다시 ‘오프로드 레이스’로 내몰릴지 모른다. 정책당국자들은 “메인스트리트(실물경기)가 고통을 받는 한 월스트리트가 번창할 수 없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소감처럼 국내 실물경기 침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hssohn@hankyung.com

# 신용평가사의 신용은 몇점?

피치, 경제지표 호전에도 등급은 강등 '이상한 판정'

## 각종 지표가 개선됐는데도 한국 등급전망 낮춘 피치

※CDS: 기업·정부 등이 부도를 내면 투자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신 채무를 갚아 주는 파생상품으로 보험과 거의 비슷. 금융회사가 받는 수수료를 CDS프리미엄이라 지칭.  
※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약자로 외화자금 수요공급 조절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영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10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돌연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두고 국내 금융·증권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피치는 지난달 21일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양호하다"며 등급과 전망을 유지한다고 거듭 확인해줬다. 하지만 불과 20일 만에 등급 전망을 낮춘 것이다. 피치는 이어 11일엔 우리나라 국채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들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일제히 낮췄다.

## 채무상환능력 등 한국상황 개선됐는데도 20일만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뒷북 "피치 주장대로라면 미국이 제일 위험해"

그 20일 동안 한국 경제나 은행 등이 나빠졌다는 징후도 없다. 오히려 그 사이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10월 30일) 등으로 가용 외환보유액이 300억 달러나 늘어나는 등 개선되는 상황이었다. 각종 지표들이 좋아지는 데도 국가 신용 전망을 떨어뜨리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사실 피치를 비롯, 미국계 무디스와 S&P 같은 거대 신용평가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폭제가 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파생상품에 '우수' 등급을 매기는 등, 시장 감시자는커녕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조차 "신용평가사들의 신용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경제 지표는 개선됐는데...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꾼 2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선 가용외환 보유고는 300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달러 발권력'을 가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국가 부도 가능성은 거의 제로(0)로 줄었고, 대외 채무 상환 능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피치가 문제 삼은 은행들의 건전성이나 유동성 문제 역시 최근 20일 동안 수치상으로 나빠졌다는 근거가 없다.

국가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우리를 괴롭혀 왔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이 기간 동안 4.27%포인트에서 2.8%포인트로 확 줄었다. 외환 부족으로 급등하던 환율도 진정세를 보였고, 주식시장 역시 회복세를 보였다. <그래픽 참조>

### ◆"은행 문제라면 미국이 더 문제"

피치는 한국의 등급 전망을 낮춘 근거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부진 ▲대내적으로는 은행 유동성 부족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다. 하지만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10일 보고서를 내놓고 피치가 내놓은

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우증권 이승우 연구원은 "미국 등 선진국들은 부실기업을 정리하기는커녕 국가적 차원에서 살리기에 나서는데도, 왜 한국만 구조조정을 안 한다고 문제 삼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11일 주가가 오르는 등 금융시장은 피치의 전망을 '무시'하는 양상이었다.

### ◆믿지 못할 신용평가사

"신용평가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 (크리스토퍼 셰이스 미 하원의원)

지난 10월 22일 미국 하원에서 정무개혁위원회 주도로 열린 청문회에서 쏟아진 얘기들이다. 지난 9월엔 무디스의 한 임원이 "우리가 무능했거나 수익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동료에게 고백한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돼 파문을 빚기도 했다.

신용평가사들의 신뢰 문제는 이번엔 처음 불거진 게 아니다. 2001년 발생한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의 부정회계 사건 때도 엔론의 문제점이 일찌감치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들은 파산하기 나흘 전엔 엔론의 신용등급을 낮췄다.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에서는 신용평가사에 대해 투자자들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를 준비 중이다. 이인열 기자 yiyul@chosun.com 최형석 기자 cogito@chosun.com

근거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증권 김성봉 연구원은 "은행의 유동성 부족이란 이유로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떨어지야 한다면, 그 1순위는 미국이고 2순위는 유럽"이라고 말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 은행은 당장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없으면 연명하기조차 힘든데 그들의 신용등급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보다 상황이 좋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피치가 제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 문제도, 전문가들은 적절치 않

정부, 은행 자본확충 지원 어떻게...

## 국책기관, 은행 대출채권·후순위채 인수 추진

정부가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관리에 들어간 것은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사전 워크아웃) 제도' 등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은행의 3분기 BIS 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은행부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선 은행들의 우선 자본 확충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금융감독 당국의 시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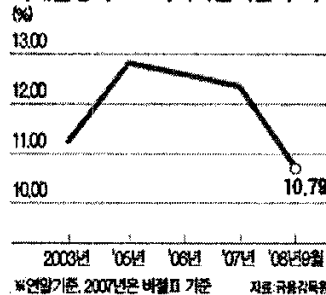
◆일부 은행 BIS비율 한 자릿수로 지난해까지도 1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순이익을 내던 은행들은 울며 사정이 급변했다. 파생상품 손실 등으로 지난 9월 말까지 순이익이 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2%(4조8000억원)나 떨어졌다. 이 때문에 18개 시중은행의 BIS비율은 9월 말 10.79%로 6월 말보다 0.57%나 하락했다. 특히 국민(9.76%) 씨티(9.50%) 수출입(8.75%) 등은 9%대로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은행권 BIS비율 하락→국제신인도 하락→총체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순위채 발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행들의 BIS비율을 15% 내외까지 높여놓고 기업 프리 워크아웃을 하겠다는 게 큰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 ◆후순위채 발행 봇물

우선 은행들은 순위를 방법인 후순위채 발행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현재 창구에서 8000억원 규모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의 후순위채를 팔고 있다. 또 우리은행은 이달 5000억원 등 연내 1조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며 신한은행 5000억원, 하나은행 5300억원, 기업은행 3000억원, 외환은행 1500억원 등을 발행한다.

주요 6개 은행이 올해 발행했거나 발행 예정인 후순위채 규모만 6조1550억원 규모로 지난해 2조9000억원의 2배가 넘는다. 후순위채를 최대한정한도(기본자본의 100%)까지 발행할 경우 전체 은행권의 BIS비율을 5.8%포인트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금융당국은 배당 자체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 배당성향이 22%에 달하는데 5%포인트만 내려도 BIS비율이 0.27%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배당을 완전 중단했을 때는 1.5%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산이다.

◆주택금융공사 은행 자산 매입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매입한 자산을 모기지담보증권(MBS)으로 전환해 시장에 매각하면 된다. 이럴 경우 은행들은 자

산 매각을 통한 자금으로 과다한 은행채를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BIS비율도 높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가진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운용배수를 50배에서 70배로 확대)를 넣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또 11월3일 발표한 국책금융기관 추가출자 때 주택금융공사에도 1000억원을 추가 출자키로 했다. 추가 출자와 운용배수 확대 등의 효과를 더하면 주택금융공사는 추가로 20조원 규모의 지원여력이 생긴다.

시장에서 은행 후순위채 발행이 여의치 않을 때 은행 후순위채를 프라이어리티 CBO에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산업은행이 은행의 후순위채를 인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또 기업 부실이나 금융불안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처럼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또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금산법은 은행이 부실화일 때(BIS비율이 8% 미만)부터 정부가 개입할 수 있고 예보법은 부실화 또는 부실화 우려(BIS비율 8% 내외)가 있을 때 등으로 정부 개입 대상을 엄격하게 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석/경제팀 기자 realist@hankyung.com

# 은행채등 1조매입...은행권 숨통

## 당국, 유동성 부족한 카드·캐피털사 지원 추진

국내 유동성 부족 상황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은행권과 제2금융권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은행권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방위 유동성 확충으로 한숨을 돌린 반면, 카드·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은 여전히 자금 조달에 애를 태우고 있다.

자금조달 창구인 채권시장 흐름에서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동안 국고채에 집중됐던 채권 매수세가 산금채, 은행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면 카드채, 할부금융채, 회사채 시장에는 여전히 냉기가 돌고 있다.

11일만 해도 한국은행은 은행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증권에 포함시켜 은행권에 1조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날 은행채 및 특수채 63일물 입찰에서 1조원이 모두 낙찰됐고 낙찰금리는 4.51~4.72%(평균 4.57%)에서 결정됐다.

### ◆한숨 돌린 은행권

이날 은행채 등 RP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평균 낙찰금리 4.57%가 은행채 RP 매입에 그대로 적용됐다면 현재 3개월 은행채 금리가 5.73%기 때문에 은행은 그 차이만큼 싸게 자금을 조달했다는 얘기다.

은행권의 리스크를 반영해 유통이 미미하거나 높은 금리로 거래되던 은행채는 이처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고채와의 스프레드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

3년물 은행채는 국고채와의 스프레드가 한때 3.5%포인트까지 벌어졌지만 10일 현재 2.27%포인트까지

3년물 은행채, 카드채 스프레드 추이 (단위=%)



\*자료:한국은행

좁혀진 상태다.

3년물 은행채 금리는 지난 10월 16일 7.98%로 8%에 육박했다가 10일 현재 7.27%로 0.71%포인트 하락했다.

9월 한 달 2조1800억원에 달했던 하루 평균 은행채 거래량은 10월에 1조8000억원으로 톱 떨어졌다가 이달 들어 10일까지 1조9000억원 거래되며 달라진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 ◆제2금융권 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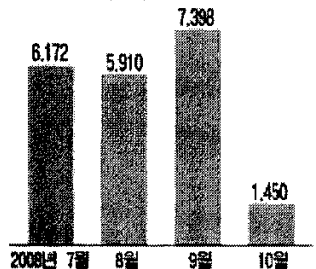
은행권 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반면 카드,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은 여전히 고전 중이다.

지난 5월 말 6%대 수준이던 카드채 금리는 11월 현재 9%에 육박하고 있다. 등급이 낮은 카드채(A-) 금리는 9.11%에 달한다.

10월 카드채 발행 규모는 6400억원으로 9월 대비 25.6%나 감소했다. 캐피털사 채권 발행 규모는 9월 7398억원에서 10월 1450억원으로 급감했다. 사겠다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금기야 카드, 캐피털사 등 제2금

급감하는 캐피털사 채권 발행 규모 (단위=억원)



용권은 금융당국에 '도움의 손길'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여신금융협회장과 캐피털사 대표들은 11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과 면담을 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여전채에 대한 매입과 은행대출 만기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캐피털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여전업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견해다. 경영 건전화 조치를 취하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일선·임성현 기자



**용어** 스프레드(spread):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가산금리. 예를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인 상황에서 어떤 회사채 금리가 7%라면 7%와 4% 차이인 3%포인트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 채권안정기금 부활한다

## 금융위·한은, 기업 자금난·금융불안 해소위해 검토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업 자금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초강력 대책인 채권시장안정기금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안기금은 지난 1999년 대우채 사태 당시 꺼내 들었던 조치로서 조성기금으로 회사채와 카드채 등을 매입하는 특단의 카드다. ★관련기사 3면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회사채시장 마비현상이 기업도산으로 연결돼 자칫 채권형 펀드런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채안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기금 조성은 한은이 은행권에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이나 직접대출 등으로 자원을 뒤 은행권이 이를 기초로 기금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의 한 핵심당국자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거래가 실종되면서 건설사 등 중견기업은 물론 우량기업으로까지 자금난이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위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채안기금 카드를 꺼냈으며 이와 관련해 두 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자금시장은 한은의 은행채 매입과 유동성 지원으로 단기시장 경색은 누그러졌지만 회사채와 CP시장까지 온기가 퍼지지 않으면서 말쑥한 기업마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채안기금을 조성해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확보,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히는 한편 우량 회사채 등을 매입해 자금시장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또

다른 노관으로 부상한 카드·캐피탈 업체 등 2금융권의 돈가뭄도 채안기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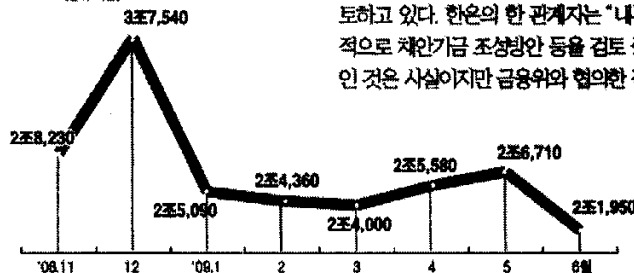
한편 한은은 금융위와 별도로 자체적인 채안기금 관련 대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채안기금 조성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위와 협의한 적

은 없다"며 "다만 현상황이 대우사태와는 다르고 금융시장이 채안기금으로 떠받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장 채안기금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채안기금은 1999년 9월 대우채 사태로 펀드런 조짐이 일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40개 금융기관이 30조원을 각 출해 조성됐으며 국공채와 투자적격 채권 등을 매입해 금리상승을 억제하고 투자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단위: 억원)



## 한국경제

2008년 11월 12일 수요일  
A26면

## 3자배정 증자 문턱 낮아졌다

### 금감원, 보호예수 조건 없어도 심사 통과시켜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제3자 배정 증자가 '머니 게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했던 금융감독당국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20억원 이상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증자 배정자들의 보호예수 조건을 달지 않아도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코스닥 기업 브이에스 에스티는 지난달 29일 미디어포트와 개인 11명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면서 보호예수를 전혀 걸지 않았지만 유가증권신고서가 금감원 심사를 통과했다. 이피에너지와 에르고믹스, 개인 32명을 대상으로 11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결의한 자강도

보호예수 조건 없이 금감원 관문을 통과했다.

이 같은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금감원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심사 문턱을 크게 낮춘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재벌 2세들의 증자 참여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구체적인 경영 계획이 없으면 제3자 배정 증자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면서 배정자 전원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걸도록 유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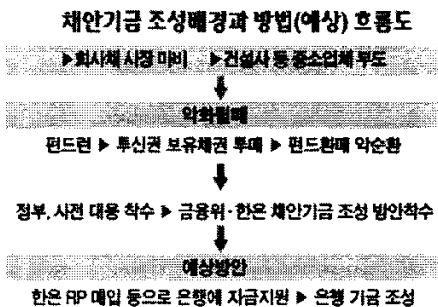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제3자 배정 증자 부작용이 우려돼 한시적으로 심사를 강화했지만 보호예수를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거래소 상장 규정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보호예수는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이나 증자 후 최대 주주로 오를 경우에 한해 6개월 이상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예희 기자 joyhy@hankyung.com

# “기업 줄도산→펀드런 차단” 선제적 특단 조치

## ■ 채권안정기금 부활 왜?

정부가 채권시장안정기금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9년 만에 다시 꺼낸 것은 기업 자금난을 해소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빠르게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회사채 시장 마비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줄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불안심리가 극대화, 펀드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전에 회사채 등을 매입해 기업의 승종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금 조성의 핵심인 한국은행이 은행채 매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이어서 당장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9년 때보다 큰 규모 조성... 우량 회사채등 매입 가능성  
기금조성 핵심 한은 소극적, 당장 액션 취할지는 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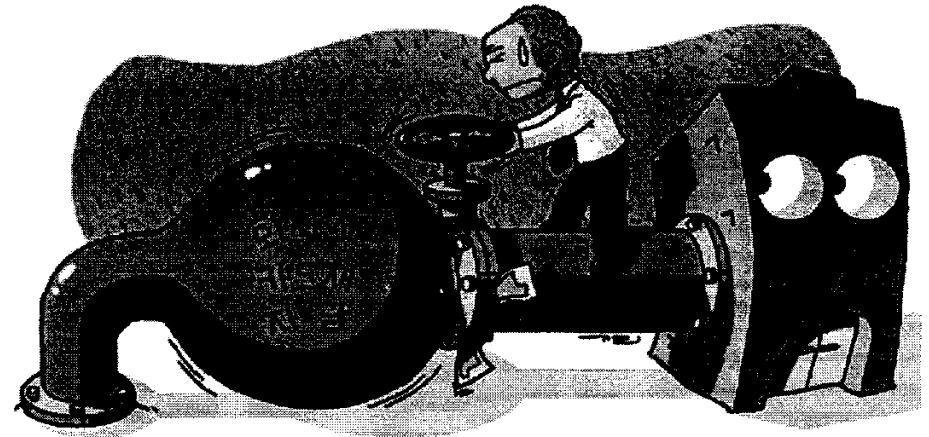


◇채안기금 카드 왜 꺼냈나=최근까지도 금융당국의 관심은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시장 경색이었다. 하지만 한은의 은행채 매입과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유동성비율 완화 등으로 단기 시장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반면 회사채 쪽으로는 여전히 온기가 전해지지 않은 채 새로운 아킬레스건으로 자리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기업의 자금수요는 커졌지만 은행권의 대출기피와 회사채 발행난까지 겹쳐 자금사정은 최악이다.

중소 건설사는 물론 일부 대형 건설사까지 위험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팔짱한 기업까지 일시적인 자금난에 봉착해 흑자 도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현실화할 경우 채권형펀드의 대규모 자금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펀드런이 발생하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는 보유 채권을 투매할 수밖에 없고 금리는 치솟는다. 이는 펀드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또다시 환매를 부추기는 한순간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특단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채안기금 설립 및 운용은 어떻게=지난 1999년 대우채 사태 당시 채안기금은 은행 등 금융권이 각축해 조성했다. 당시에는 펀드 주식시장 위기로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몰려든 터라 은행이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권에 여유가 없다. 오히려 은행이 생사의 기로에 섰다. 결국 한은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은이 기금마련에 동의할 경우 문제는 자원방식과 기금 규모, 매입대상 기준이다. 기금 출연은 한은법상 간접 시 민간에게 직접 대출해줄 수도 있고 은행권에 환매조건



부채권(RP) 방식을 통해 자원해줄 수도 있다. 통안채 조기 상환을 통한 출자와 금융기관 대출 등도 가능하다.

핵심은 기금 규모다. 1999년 채안기금 규모가 30조원이었는데 당시 전체 채권시장이 465조원에서 현재 1,000조원으로, 회사채는 128조원에서 211조원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당시보다 더 큰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조성 기금으로는 우량 회사채, 카드채, 투자자격 채권 등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 언제 나설까=한은은 채안기금 방안에 대해 이미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깊은 수준까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 내부적으로 채안기금 조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위와 아직까지 협의하지는 않았다”

고 말해 액션 가동까지는 시간이 남았음을 내비쳤다.

한은이 이처럼 소극적인 이유는 대우채 사태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시장 상황도 급박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 채권시장은 회사채가 중심이었고 핵심에는 대우채가 있었기 때문에 대우채 문제 해결이 시장의 사활을 좌우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회사채 거래 실종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우량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채 매입 건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한은이 결국 받아들였던 만큼 채안기금만 또한 한은이 끝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 한은의 행보가 주목된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 내일 수능...은행·증시 10시 개장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전 금융회사의 개장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진다. 1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증권 정규시장은 오전 10시~오후 4시로 변경되며 시간외 시장은 장 개시 전 오전 8시 30분~9시 30분, 장 종료 후 오후 4시 10분~4시 30분으로 각각 연기된다.

장 종료 후 시간 외 대량매매나 단일가 매매거래의 종료시점은 현행과 같은 오후 6시다. 서울외환시장도 개장 시간이 오전 10시로 평소보다 1시간 늦춰진다. 마감시간은 오후 3시로 종전과 같다.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평소보다 30분씩 늦춰진다. 한예경 기자

재정부·금융위·한은 공동  
해외 홍보자문 계약 체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이 공동으로 해외 홍보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외신 대응을 일원화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3개 정부기관은 최근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와 자문 계약을 맺고 주요 외신들의 반응 점검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자문 업무를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3개 기관 공동으로 주간 한국 경제 뉴스레터(Weekly Economy Bulletin)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이 뉴스레터는 주요 외신과 오 피니언 리더층에 배포되는 것으

로 재정부·금융위·한은의 주요 보도자료와 행사, 브리핑 등의 요약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주에 진행될 행사나 브리핑에 관한 간략한 알림 등이 담겨 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금융환경이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언론의 시각이 좁지 않다”며 “한국 경제의 실상을 해외에 제대로 알리는 차원에서 공동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국내를 비롯 해외 동지에서 한국 경제를 다루고 있는 외신들과 정기적인 접촉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책임지고 하라” 대통령 호령에  
뒤늦게 부산 떠는 금융위

“지금 바쁩니다. 나중에 통화합시다.”(금융위 A과장)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또 다시 언급하자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뒤늦게 분주해졌다. 주요 국·과장급 간부들은 전화를 받지 않을 정도였다.

전광우 위원장은 국무회의 직후 전화로 간부들에게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각 국별로 중소기업업동성지원TF(태스크포스)팀, 서민금융지원TF팀 등이 잇달아 소집돼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A과장은 “점심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금융위 TF팀 회의에선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영세서민에 대한 무담보 소액 대출)를 확대하는 방안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에게 소액 저리(低利)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간부들은 이 대통령이 전광우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지시한 것을 ‘질책성’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 외화차입에 정부가 지급 보증해달라고 악쓰고 다닌 것은 우리인데 결국 해준 것은 기획재정부였다”면서 “금리 인하와 은행채 매입도 한국은행 소관”이라고 말했다.

B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예산을 투입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 소액 저리 대출을 확대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재정과 세제는 기획재정부, 금리는 한은이 쥐고 있어 정책 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외국인 주주비율이 50%를 넘는데 어떻게 노골적으로 은행 경영에 개입할 수 있나”고 하소연했다. C과장은 “그렇게 관치(官治)금융을 비판하더니 이제는 은행 팔 비트는 관치를 왜 안 하냐고 따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D국장은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금융위가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서민 지원 정책들을 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반색했다.

나지홍 기자 jhr@chosun.com



**이명박 대통령의 잇단 은행 비판**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금융위기 때는 회사가 재품을 못 팔아서가 아니라 돈이 돌지 않아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10월13일 1차 라디오 연설)

“은행의 ‘꺾기’가 여전하다. 정부는 돈을 풀고 있지만 창구는 공공 일어 붙어 있다”  
(11월3일 2차 라디오연설)

“은행이 과연 필요한 돈을 제때 풀어줄지 걱정이다”  
(11월10일 중소기업 현장대회의)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임해 달라.”  
(11월11일 국무회의)

“은행은 돈이 필요 없을 때는 갖다 쓰라고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인면을 바꾸는 경우를 많이 봤다.”  
(11월4일 무역투자진흥회의)

## 대통령의 대출 독려에도 꿈쩍않는 은행들

이명박 대통령이 은행에 대한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13일 이후 벌써 6번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옮겨붙고 있는데, 은행들이 기업·가계에 대한 금융자원을 늘리기는커녕 대출 회수와 금리인상으로 고통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은행들 태도에 변화가 없자 이 대통령은 11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생각으로 (은행들이 서민·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압박달

라”고 말했다. 금융정책의 수장(首長)에게 ‘배수의 진’을 주문한 것이다. 은행들의 자금공급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어찌서 먹히지 않을까. 곧로 그들의 몸 사리기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은행 경영진들의 가독권 의식을 나무라는 자적도 나온다. 반면 금융권에선 “대통령이 시중은행의 대출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박도 나온다.

### 1. 안먹히는 대통령 말 은행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우라도 사정이 급한데 어쩔니까.”(A시중은행 부행장)  
이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우리 코가 석자다”라며 기업·서민대출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자세를 펴고 있다. 은행들에게도 사정은 있다. 건전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자주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지표를 높이려면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12~13%에 달하던 4대 시중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0% 안팎으로 내려와 있다. 국민은행의 경

우 10%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중소기업·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신용카드 대출 등의 연체율이 높아진 데다, 키오 등 통화파생상품 손실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로 하여금 이 비율을 10% 이상 유지하도록 지도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우량은행으로 인정받으려면 11~12%는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비율을 높이려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든지, 연체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산을 줄여야 한다. 증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자주 줄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B시중은행 임원은 “IMF와한위가 작전에도 정부 뜻대로 대출 확대에 나섰다가 은행들이 부실을 뒤집어쓴 적이 있다”며 “정부가 (대출을)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철환 기자 [plomat@chosun.com](mailto:plomat@chosun.com)

### 2. 총내 배는 관료 없다 “깊이 손댔다간 피해본다” 의식 만연

“목숨 걸고 총내 배는 관료가 없어 서 그럴죠.”  
대통령 지시가 먹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직 차관급 인사 A씨는 이렇게 분석했다. A씨는 “10년 전 외환위기 때는 금융 라인에 담당자들이 다들 몸을 던졌다”며 “지금은 자기가 책임지고 난국을 수습하려는 관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관치(官治)’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위기 상황을 돌파해가는 ‘행동

파’가 필요하다. 하지만 강경직 전 경제부총리(외환위기 책임)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외환은행 매각 책임) 등이 반정에 서는 등 ‘손에 피를 묻혔던’ 행동과 관료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아젠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간연구소의 B소장은 “자기 살길만 찾으려는 은행들을 살뜰히 기업과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협력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의 금융당국 책임자들은 그럴 만한 리더십이 없

다”고 말했다.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이나 이창용 부위원장은 아코노미스트·학자 출신으로 전문성은 있으나 시장을 리드할 만한 행동 추진력은 약하다는 평가다. 일선 은행들을 직접 감독하는 김충창 금융감독원장 역시 ‘돌격대장’ 성품은 아니다. 그래서 정교한 기술과 속도전이 필요한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훈 기자 [hkim@chosun.com](mailto:hkim@chosun.com)

### 3. 베틀은 경영진 “지배구조 흔들린다” 유상증자 등 거부

은행들이 자금난에서 벗어나 기업·서민 대출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충분한 자본증강이 이뤄져야 한다.  
자본확충을 위해선 은행이 ①기존 주주나 ②새로운 대주주, 아니면 ③정부로부터 종자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세 가지 모두 힘들거냐 곤란하다며 베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기존 주주들로부터 유상증자를 받는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자금경색이 심각하고, 주식시장이 얼어붙

은 상황에서 사실상 힘들다. 그렇다고 새로운 대주주를 찾거나 정부로부터 자본을 수혈 받는 것은 기존의 은행 지배구조를 뒤흔다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 은행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은행 경영진들의 가독권 의식 때문에 유상증자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다. 은행을 튼튼하게 만들고, 나아가 거래기업과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증자를 통해 자본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사실상

오너’ 같은 역할을 하는 은행 경영진들이 자기 보신(保身)을 위해 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대신 후순위채(원금 상환 권리가 뒤로 밀리는 채권) 발행을 통해 지분 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자본 비율을 보강하는 전략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후순위채는 결국 빚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은행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문제가 있다.

정철환 기자

□ 1년만에 무너진 국민소득 2만달러

# 국민소득 세계 34위 → 42위로 추락



LG경제研, 연평균 환율 1086원 가정해 전망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 2만달러 돌파'는 흘러간 꿈이 되는가.

원화값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2007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1년 만에 2만달러 밑으로 고꾸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예상치는 1만8365달러로 나왔다.

올해 달러당 원화 평균 환율 1086원에다 예상성장률 4.4%를 가정해서 산출한 금액이다. 이 국민소득 예상치는 올해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에 확정 발표될 실제 국민소득 수치와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8365달러로 낮아지면 2007년 34위였던 우리나라 순위는 올해 42위로 8계단 떨어진다.

이 수준을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올해 한국의 위상은 초라해진다.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이 우리를 앞질러 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세계 경기 침체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9259달러에 그쳐 2년 연속 소득 1만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가 되고 경제성장률은 3.6%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수준에서는 내년에도 소득 2만달러가 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무디스 등 일부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대로 보는 견해도 있어 내년 1인당 GNI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만약 내년 원·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인 1300원대로 유지된다면 1인당 GNI는 1만6296달러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0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4년 전으로 소득수준이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1995년 소득 1만달러를 돌파했던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소득이 7300달러까지 고꾸라진 바 있다.

2000년에 1만달러로 다시 복귀한 한국은 2007년 최초로 2만달러를 돌

세계 주요국 1인당 국민소득 순위(추정치)

(단위=달러)

| 순위 | 국가      | 2007년   |
|----|---------|---------|
| 1  | 룩셈부르크   | 103,125 |
| 2  | 노르웨이    | 83,485  |
| 3  | 카타르     | 78,754  |
| 4  | 아이슬란드   | 64,548  |
| 5  | 아일랜드    | 60,209  |
| 12 | 미국      | 45,725  |
| 22 | 일본      | 34,296  |
| 34 | 한국      | 20,015  |
| 40 | 사우디아라비아 | 15,724  |
| 41 | 오만      | 15,714  |

\*자료=LG경제연구원

| 순위 | 국가      | 2008년   |
|----|---------|---------|
| 1  | 룩셈부르크   | 118,045 |
| 2  | 카타르     | 106,460 |
| 3  | 노르웨이    | 102,525 |
| 4  | 덴마크     | 67,387  |
| 5  | 스위스     | 67,379  |
| 17 | 미국      | 47,025  |
| 24 | 일본      | 37,940  |
| 34 | 오만      | 21,704  |
| 35 | 사우디아라비아 | 21,221  |
| 41 | 슬로바키아   | 18,585  |
| 42 | 한국      | 18,365  |

파했지만 1년 만에 다시 1만달러로 회귀하게 된 것. 그나마 최근 원화값 급락에도 국민소득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년간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송 연구위원은 "상반기에 원화환율이 달러당 900~1000원대에서 유지됐기 때문에 그나마 소득 하락폭이 작았다"면서 "지금 환율 수준이라면 소득은 1만달러 중반 이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달러로 표시하는 1인당 GNI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얘기.

해외 여행객들의 주머니는 얇아지고 특히 원화로 월급을 받는 해외 주재원이나 해외 유학생을 보유한 가정에서는 타격이 크다. 이런 실질적인 영향뿐 아니라 '소득 2만달러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국민의 심리적 인 위축도 예상된다. 안정훈 기자

## ★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에 LG경제연구원이 산출한 1인당 국민소득(GNI) 예상치는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환율 수준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올해 경제성장률 4.4%, 원·달러 환율 수준 1086원으로 가정하고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3.1%)를 감안해서 국민총소득을 구한 후, 추계 지표를 통해 나타난 인구 수(약 4860만명)를 기준으로 나누어 1인당 GNI를 산출했다. 내년 1인당 GNI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예상치(3.6%), 환율 예상치(1100원)를 토대로 분석했다.

전 세계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예상치는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바탕으로 작성해 한국의 1인당 GNI와 비교해 순위를 책정했다.

## &lt;뉴욕증시&gt; 기업실적 악화 부담에 이틀째 하락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스타벅스와 주택건설업체 톨 브러더스 등의 악화된 실적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주가가 전날에 이어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잠정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76.58포인트(1.99%) 내린 8,693.96로 마감, 8,700선이 무너졌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35.84포인트(2.22%) 떨어진 1,580.90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날보다 20.26포인트(2.20%) 하락한 898.95에 각각 장을 마쳤다.

이날 다우 지수는 개장 전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약세로 출발한 뒤 낙폭이 점차 커져 한때 8,600선이 위협받기도 했다.

오후 들어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이 원금유예와 금리인하 등을 통해 모기지 연체자들을 구제해주겠다고 발표하자 일시적으로 낙폭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하락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급격히 악화된 실적과 함께 조만간 운영자금 등 유동성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제너럴모터스(GM)는 전날 주가가 62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13.1%나 폭락하면서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

이날 스타벅스는 직전 분기 순이익이 540만달러(주당 1센트)로 작년 동기 1억5천850만달러(주당 21센트)보다 무려 97%나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점포폐쇄와 직원감축 등 특별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 규모는 주당 10센트로 월가의 전망치인 주당 13센트에 못미쳤다.

주택건설업체인 톨 브러더스도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전분기 매출이 6억9천100만달러로 작년동기 11억7천만달러보다 41%나 급감했고, 인터콘티넨탈호텔도 3.4분기 순이익이 28%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톨 브러더스는 0.1%, 인터콘티넨탈호텔은 7.1%가 하락했으며 스타벅스 주가도 2.1% 떨어졌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은행 지주회사로 전환을 승인받았지만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6.6%나 하락했고, 미 정부의 구제금융 규모가 확대된 AIG도 0.9% 떨어졌다.

한편, 경기침체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부동산금이 위험자산을 기피하고 미 달러화에 몰릴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미 달러화는 약 2주일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ICE선물 미 달러 지수는 지난달 28일 이후 최고치인 87.268까지 치솟기도 했으며 전날보다 1.4% 오른 87.159로 거래됐다.

유로화는 한때 2주 만에 최저인 1.250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결국 전날보다 1.6% 하락한 1.2528달러로 거래됐다.

국제자금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는 2.18%로 전날보다 0.06%포인트 떨어지면서 지난 2004년 10월29일 이후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하루짜리 달러 리보는 미국 휴일인 관계로 금리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유가는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 종가보다 3.08달러(4.9%) 떨어진 배럴당 59.33달러에 마감,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60달러선이 무너졌다. 12월 인도분 금값도 온스당 732.80달러에 마감돼 전날보다 13.70달러(1.8%) 떨어졌다.

hoonkim@yna.co.kr

(끝)

# 미국發 실물공포 한국기업 덮친다

미국 경제위기의 불이 금융에서 실물부문으로 옮겨붙으면서 한국기업들에 불뿔이 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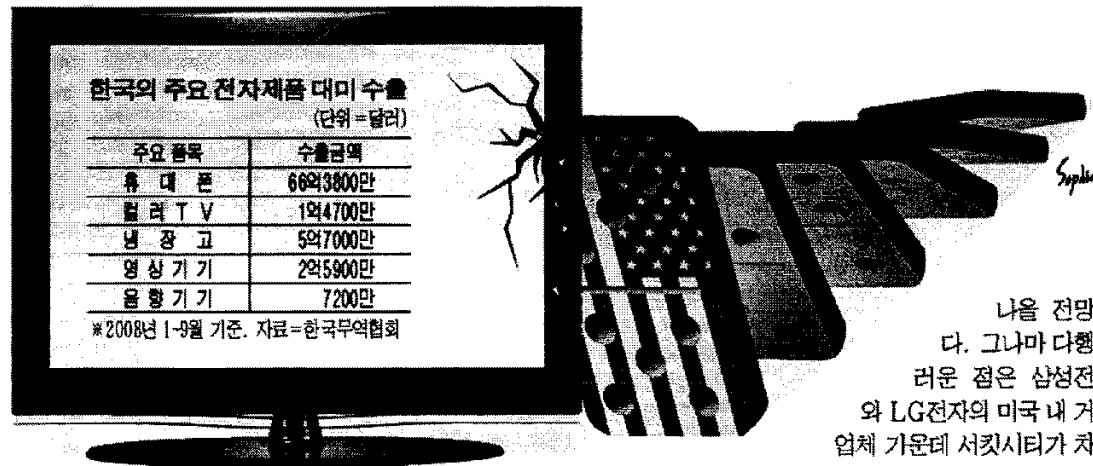
10일(현지시간) 미국 3위의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서킷시티가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서킷시티에 전자제품을 공급해온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체들도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서킷시티에 주로 TV를 비롯해 냉장고, 홈시어터, 오디오-비디오 등 제품을 공급해온 만큼 우선 매출채권 문제가 걸려 있다.

서킷시티는 전자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 모두 6억5000만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1억1590만달러, LG전자(제니스 포함)는 4110만달러여치의 채권이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유통채널별로 수출입 보험에 들어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서의 매출채권은 수출입 보험에 가입해 있는 만큼 (서킷시티로부터) 이 금액을 때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의 판매망 확보다. 서킷시티의 파산보호 신청 외에도 미국 전역에 가정용품 체인망을 갖고 있는 리텐스 앤 싱즈가 자금난으로 최근 파산한 데 이어 미국 남서부 지역에 149개 매장을 가진 백화점



## 美 가전유통·백화점 체인 잇단 도산으로 삼성 1억달러·LG 4천만달러 채권 묶여 자동차업계 판매망 위축 우려 전전긍긍

업체인 머빈스도 도산했다. 제너럴 모터스(GM)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내년에 운영자금 바닥이 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다.

서킷시티는 이날 언론에 ‘각 점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기업 회생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전자업체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거래업체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수출입 보험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

고, 만일 이 같은 상황에서 거래를 지속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래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서킷시티가 회생하더라도 신뢰도 추락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들어 거래를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킷시티는 미국과 캐나다에 각각 70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만큼 거래선 축소에 따른 중장기 피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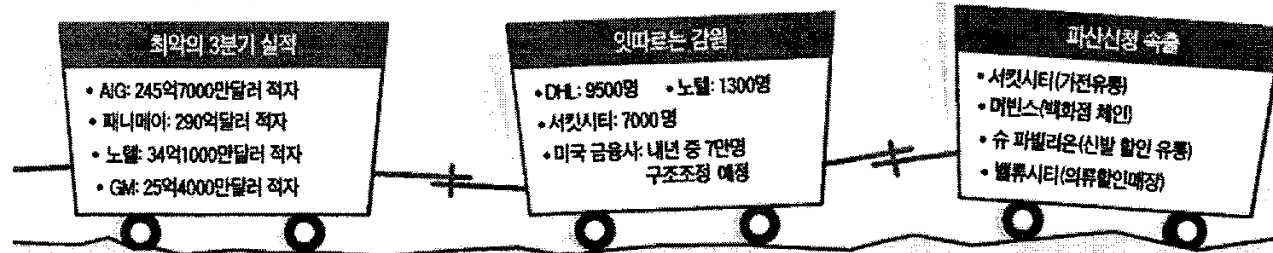
나을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내 거래업체 가운데 서킷시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베스트바이, 홈디포, 시어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가 서킷시티하고만 거래하고 다른 곳과는 안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베스트바이 등 다른 유통업체들과 더 많이 거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판매는 전자제품보다 먼저 실물경기 위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대자동차만 해도 올해 들어 10월까지 미국 판매대수는 35만8484대로 지난해 동기(38만8639대)보다 7.8% 줄었다. 현대차는 서킷시티 파산보호 신청으로 실물경기가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 수출에 추가적인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대영·김병호 기자

거세지는 금융위기 후폭풍



## 美, 금융·제조·유통 초산업 '속대발'

AIG·패니메이·노텔 등 3분기 최악 실적  
대규모 감원 확산·파산신청 줄줄이 대기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확산되며 제조 유통 등 미국의 전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파산위험에 몰린 자동차업체가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미 2위 가전제품 유통체인인 서킷시티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감원에 나서면서 실업률은 치솟고 있다.

정부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AIG는 10일 3분기에 245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용 다폴트스와프(CDS) 판매에 따른

부실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정부로부터 400억달러를 추가 지원받기로 했다. AIG가 정부로부터 받는 총 지원금은 당초 850억달러에서 1500억달러로 늘어났다.

구제금융 지원으로 사실상 정부 소유가 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회사인 패니메이는 주택가격 추가 하락에 따른 부실 증가 등으로 3분기에 290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면 4분기에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 정부의 추가 자금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북미 통신장비회사 노텔은 3분기 34억1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2001년 이후 최악의 분기 실적을 냈다.

이날 서킷시티는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국에 721개, 캐나다에 770개 매장을 운영해 온 서킷시티는 불황 여파와 온라인 유통업체들과의 경쟁 격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서킷시티 파산 신청을 계기로 유통업체의 파산과 폐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대규모 감원에 나서고 있다. 독일 국제우편 및 화물배송업체인 DHL은 미국 내 특급우편 사업에서 철수하고 9500명을 추가 감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DHL 미국 법인의 감원 규모는 총 1만4900명

으로 늘었다. 이날 3분기 최악의 실적을 공개한 노텔도 1300명을 구조조정키로 했다. 이 밖에 가전업체 월플, 휴대전화업체 모토로라, 제약업체 머크 등도 수천명씩의 감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들의 감원은 업종을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골드만삭스가 3000명 인원 감축에 들어갔으며, 씨티그룹도 2만3000명 감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는 각각 5700명, 4400명을 내보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금융사들이 내년 중 7만명을 추가로 내보내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아이원 특파원 klee@hankyung.com

# 오바마-부시 경제해법 시각차

## 선거후 첫 백악관 회동...FTA 속도 놓고도 의견차 팽팽

【워싱턴 윤경호 특파원】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선거 후 처음 가진 백악관 공식 회동은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었다.

하지만 핵심적인 현안을 놓고 양측은 팽팽하게 의견을 보여 어느 것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과 조지 부시 현 대통령은 10일 오후(현지시간) 정권 인계자와 인수자 자격으로 백악관에서 만났다. 배석자를 두지 않은 둘만의 만남 시간도 있었다. 당선 후 시카고에 머물고 있던 오바마는 이날 일부러 워싱턴DC에 비행기로 이동해 왔다가 백악관 방문 후 바로 시카고로 돌아갔다. 부시 대통령은 부인 로라 여사와 함께 현관 앞에 나와 오바마 부부를 마중했다. 나갈 때도 부시 대통령은 차 앞까지 배웅하며 최대 예우를 표했다. 로라 여사

는 예비 영부인 미셸에게 대통령 부부 숙소 등 백악관 내부를 소개했다.

이런 우호적이고 화기에애한 결모습과 달리 부시와 오바마 간 단독 대화에서는 긴장감이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대변인이나 오바마 정권인수팀 관계자 누구도 이날 회동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이날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유익하면서 건설적이며 우호적이었고, 좋은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고만 전했다. 첫 상견례로서만 의미를 부여할 뿐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정리된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2차 경기부양책, 자동차업계 지원 방안, 콜롬비아·파나마·한국 등 3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 등 3대 경제 현안

에 대해 부시와 오바마는 강도 높은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자동차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차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강력한 필요성을 주장한 오바마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견지해 성과를 이뤄내는 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WP는 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경기부양책을 공화당이 요구하는 FTA 처리와 연계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오바마 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YT는 자동차업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오바마 당선자가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 중 일부를 자동차업계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부

시 대통령은 민주당의 콜롬비아 FTA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고 설명했다.

3대 자동차업체가 미국 경제에서 갖는 비중과 파급력은 관련 통계 이상이다. 빅3가 도산하면 하도급업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00만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다. 오바마 당선자로서는 자동차업계에 대한 구제 방안을 어떤 방식으로든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한편 오바마 당선자는 차기 정부 각료 인선안을 오는 15일 열릴 G20 경제정상회의 이후에나 발표할 것이라고 스테파니 커터 정권인수팀 대변인이 밝혔다.

오바마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할 때까지 현안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혀 G20 회의 불참을 공식화한 바 있다.

# 보험사들 자본 확충 적극 나섰다

## 내년 4월 RBC제 시행따라 증자·자산매각 추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당초 예정대로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내년 4월부터 RBC제도를 예정대로 도입할 예정이나 보험사들이 보다 엄격한 자산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RBC제도는 보험사에 내재된 금리 및 시장·신용·운용리스크 등을 정교하게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쌓아두도록 만드는 제도다.

또 자산운용리스크를 금리와 시장·신용 등 3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주식·채권·대출 등 자산특성에 따라 리스크를 반영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급여력비율제도보다 보험사의 자산건전성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RBC제도 시행에 앞서 자산매각 및 증자를 통해 미리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주주선공모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1,5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서울 마포구 본사 사옥을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급여력비율은 164%로 RBC제도가 도입되면 자산건전성비율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손해보험도 현재 160%대인 지급여력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안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ING

생명도 네덜란드 본사를 상대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지난 10월 자사주 14.9% 중 9.9%(416만주)를 일본 아이오아손보에 392억원에 매각한 데 이어 나머지 지분도 처분할 계획이다. 자사주 매각으로 9월 말 현재 141%인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170%를 상회하게 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크게 웃돌기 때문에 자산건전성에 큰 문제는 없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주식과 채권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자본확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 세계경기 내년 하반기 U자형 회복

## 포스코연 전망

세계 경기가 내년 하반기부터 U자형 회복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11일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 방향 및 파급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내년 하반기부터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스코연은 "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정책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중국이 8% 성장으로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선진국의 정책 공조, 재정정책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추가로 주택가격이 급락하거

나 금융부실의 '불씨'가 확대된다면 세계 성장률은 1% 미만이고 3년 이상의 'L'자형 장기 불황도 올 수 있다고 포스코연은 분석했다.

내년 한국 경제는 수출 부문에서 고전이 우려된다고 포스코연은 전망했다.

포스코연은 "수출 불안과 내수 동반 침체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신흥국들의 연이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기업의 해외 사업 리스크는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은행들은 아직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에 따라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포스코연은 분석했다.

안정훈 기자

## 美 신용카드사까지 구제금융

FRB, 아멕스 은행지주사 전환 승인 - 공적자금 투입위해

미국 4위 신용카드업체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아멕스)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승인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로써 올 들어 FRB로부터 은행지주사 전환을 승인받은 금융사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아멕스 3곳으로 늘어났다.

아멕스는 은행지주사가 됨에 따라 상업은행을 신설 또는 인수, 예금과 대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미 재무부의 7000억달러 규모 은행권 구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케네스 체노 아멕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금융위

기로 시장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받기 위해 지주사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멕스는 경기침체에 따라 신용카드 고객들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면서 유동성 위기 우려가 불거져왔다. 총 자산 규모가 1270억달러로 파악되고 있는 아멕스는 지난 3분기 순이익이 8억1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지난달 말엔 전체 인력의 10%인 7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 서울경제

2008년 11월 12일 수요일 A12면

## 美 아멕스 은행지주사로 전환

FRB서 승인... 저금리로 자금조달 가능해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0일(현지시간) 신용카드사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X·아멕스)가 요청한 은행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아멕스는 상업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중앙은행의 재할인 창구 등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예금 보호도 가능하게 됐다.

FRB는 설명을 통해 “현재의 위기 상황이 매우 이례적일 만큼 긴급하다고 판단해 조속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미 신용카드 업체들은 투자자들이 채권 매입을 꺼리면서 지난 10월 채권 매출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로를 기록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FRB에 따르면 아멕스의 총 자산 규모는 1,270억달러로 기업 대출 회

사인 센추리언뱅크 등을 보유하고 있다.

아멕스는 은행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계기로 자산규모 250억달러의 센추리언뱅크를 은행으로 완전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아멕스의 케네스 체노트 최고경영자(CEO)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FRB의 이번 결정이 회사의 구조를 재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FRB는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도 유동성 부족사태에 직면한 미 1~2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은행지주회사로 기업구조를 변경한 것을 승인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 씨티, 모기지대출자 구제

6개월간 50만명 압류등 유예키로

JP모건·BOA등도 상환조건 개선

씨티그룹이 2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대출 프로그램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향후 6개월간 50만명의 모기지 대출자가 차압 조치를 받지 않게 됐다.

이번 조치는 사상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모기지 대출의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모기지 대출자들과 협의하도록 연방정부와 의회가 압력을 넣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모기지 대출자 구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연방정부는 급증하는 주택 차압을 방지하기 위해 모기지 업체들에 대해 모기지 조건을 수정하는 방안을 적용하도록 압박해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10일(현지시간) 모기지 대출로 구입한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대출 상환능력이 충분한 대출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차압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씨티그룹의 모기지 부문 최고경영자(CEO)인 산지브 다스는 "우리는 고객들이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이 같은 혜택은 특히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에 집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계획을 내놓았다.

JP모건은 지난달 31일 1,100억달러 규모의 볼량 모기지 대출에 대해 상환조건을 개선시켜 대출자들을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로운 계획에 따르면 40만명이 향후 2년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JP모건이 최근 인수한 워싱턴뮤추얼 고객에 대해서도 시행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역시 컨트리와이드파이낸스의 대출자를 포함해 올해 110억달러, 23만명에 대해 대출조건을 수정했다. BOA와 컨트리와이드의 부실 모기지 대출 규모는 1,200억달러에 이른다.

모기지 업체들 역시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모기지업체 연합인 호프나우(Hope Now)가 대출 받은 사람들의 월 상환액을 줄이는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사실 모기지 업체들이 주택차압 위기에 직면한 대출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다 신속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미국 내 주택경기는 최악의 부진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 조사업체인 리얼터트랙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76만 5,558채의 주택이 다팔트 위험에 놓여 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주택 가격 역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20대 대도시의 집값은 7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뒤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8월 주택 판매는 전년대 30% 이상 감소했다.

/문병도기자 do@sedoo.kr



미국 주택시장이 최악의 불황을 겪는 가운데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모기지 대출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출 상환 조건을 수정하고 차압을 유예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블룸버그 자료사진

# 日 다시 세계를 사들인다

## 글로벌기업 '반값세일' ... 올 해외M&A 사상최대

일본 종합상사들이 세계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마음껏 쇼핑을 즐기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알짜배기 기업들조차 '반값 세일' 리스트에 속속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다들 자금압박에 시달리다보니 인수자로 나서는 기업이나 투자회사는 드문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실탄'을 잔뜩 쌓아둔 일본 종합상사들의 행보가 돋보인다. 매물은 그 어느 때보다 싸고 엔화 강세로 공간은 더 들어났기 때문이다.

11일 닷케이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계열은 세계 최대 아크릴수지 제조업체 영국의 루사이트를 1500억엔(15억3000만달러)에 인수할 예정이다. 점유율 4위 업체가 보유 중인 막대한 현금유보 바탕으로 1위 기업을 집어삼키는 것이다.

이번 건을 제외하고도 올들어 일본기업들의 해외 M&A 규모는 사상 최고액을 기록 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업체가 사들인 해외기업은 610억달러 규모에 달해 기존 최고 기록인 2006년의 442억달러를 넘어섰다. 화학업체



의 M&A 금액은 1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기록인 9100만달러를 초과했지만 미쓰비시계열이 루사이트를 인수한다면 또 한번 기록이 경신될 전망이다.

일본 최대 M&A 중개업체 레코프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일본기업의 해외 M&A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0% 증가했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이 모간스탠리에 9000억엔을 출자한 게 단일 M&A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다케다약품공업이 미 바이오업체 밀레니엄을 인수한 8900억엔이 2번째다.

모간스탠리, 리먼브러더스 등 금융위기로 망가진 월가의 심장부는 이미 일본기업들이 점령했다.

유럽과 아시아 등 신흥시장(이머징마켓)에도 일본 대기업들은 활발히 손을 뻗치고 있다.

지난주 프랑스 식품업체 다농의 프루코주스사업부를 7억7000만달러에 인수한 일본 맥주업체 산토리는 추가로 몇개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22억달러의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경쟁사 미쓰비시보다 한발 늦긴 했지만 스미토모상사 역시 금융식품 등 해외기업 인수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닷케이신문에 따르면 스미토모는 보유 중인 현금과 조달 가능한 은행융자를 포함해 약 1조엔을 해외기업 인수용 실탄으로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1980년대 장기불황 직전에 나타난 일본의 M&A붐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시 특벨레센터 등 미국 주요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인 일본 대기업의 '월가 공습'은 미국 내에서 반일감정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거품 붕괴와 더불어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일본 대기업들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이규창 기자 ryan@

## 원자바오 총리가 제시한 경기부양 4원칙

파이(快),중(重),준(準),스(實).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10일 전국 지방정부 책임자와 주요 부처 장관을 소집해 가진 경기부양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네 글자로 요약되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짓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를 한 달도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홍콩 명보는 전했다.

원 총리는 먼저 "경기부양책 시행은 존각을 다투는 일로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신속하게(快) 일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게감(重) 있는 조치를 취해 경기가 급속도로 하강하는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부양책으로 즉효를 볼 수 없으려면 핵심(準)을 잡고,이를 확실히 시행(實)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4조위안(8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을 추진하면서 투자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온갖 수단을 써서

快 신속하게

重 대규모로

準 핵심부문에

實 확실하게 지원

라도 국민 소득을 늘려 구매력을 높이는 데 힘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산업은 철강 전자제 가전 금융시장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중국 경제의 핵심산업이라며 부동산시장 육성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

## 중국판 뉴딜 시작됐다 ② 금리·지준을 인하 등 통화팽창 가속

## 中 “인플레 걱정없다…돈 풀어 경제살리자”

【베이징 최경선 특파원】 중국이 철도·도로·공항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에 나선 데 이어 통화정책에서도 금리·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한 팽창 정책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11일 중국국가통계국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4.0%로 최근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염려는 그동안 중국 경제당국이 가장 고심해온 부분이다. 올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7%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통화·재정 등 모든 거시경제정책 초점이 물가 억제에 맞춰져 왔다.

그러나 그동안 긴축정책과 최근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6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9월에 이어 10월에도 중국 당국이 올해 물가상승률 억제 목표선으로 제시한 4.8%를 밑돌았다.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8월 10.

한국-중국 교역 위상

(단위=억달러)

| 연도         | 중국 교역에서 한국 위상 |           |           | 한국 교역에서 중국 위상 |         |           |
|------------|---------------|-----------|-----------|---------------|---------|-----------|
|            | 수출            | 수입        | 총교역       | 수출            | 수입      | 총교역       |
| 1992       | 24(5위)        | 26(7위)    | 50(7위)    | 27(6위)        | 37(5위)  | 64(5위)    |
| 2002       | 155(4위)       | 285(3위)   | 440(5위)   | 237(2위)       | 174(3위) | 421(3위)   |
| 2007       | 561(4위)       | 1,040(2위) | 1,601(4위) | 820(1위)       | 632(1위) | 1,452(1위) |
| 2008. 1-7월 | 430(4위)       | 681(2위)   | 1,111(4위) | 573(1위)       | 463(1위) | 1,036(1위) |

\* 괄호 안은 순위(홍콩 포함). 자료=중국세관통계, 한국무역협회, KOTRA

1%까지 치솟았으나 9월에 9.1%로 둔화된 데 이어 10월에는 6.6%로 뚝 떨어졌다.

## ◆금리 인하 추가 단행 예상

물가 상승 압력이 전문가들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낮아지자 인민은행이 금리·지준율을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10월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빠르고(快) 심도 있게(重) 허가하고(準) 실행(實)하라”며 대출·자금 집행의 4가

지 원칙을 제시했다.

또 중국 국무원은 2007년부터 지속해온 ‘긴축’이라는 화폐정책 기본 방향을 최근 ‘적당한 이완(適度寬松)’으로 전환했다. 중국 화폐정책에서 통화팽창을 의미하는 ‘이완’이라는 단어는 최근 10년여 사이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는 1997년 말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화폐정책 기본 방향으로 내세웠던 ‘온건(穩健)한 통화정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팽창 정책이다.

이에 따라 지난 2개월 동안 세 차

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한 인민은행이 곧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04년 5.31%던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지난해 말 7.47%까지 인상했으며 올해 들어 세 차례 금리 인하에도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는 여전히 6.66%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많다는 뜻이다.

중국국제금융공사도 11일 “내년 말 이전에 인민은행이 금리를 2.16%포인트, 지급준비율을 3.5-5.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경기부양책에서 시중은행 대출 억제와 관련한 행정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와 더불어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직접적인

경쟁환경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 중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中 경기부양정책 ‘양날의 칼’?

그러나 중국 경기부양책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경기부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나 공사채를 매도하거나 이들 채권에 대한 매수비율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5410억달러의 미국 국채와 2000억달러의 공사채를 포함해 1조달러에 달하는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8월에만 미국 국채 보유액을 223억달러 늘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매각하거나 추가 매입을 중단하면 금리 상승에 따른 모기지 차입비용 상승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중국, 경기부양 총력전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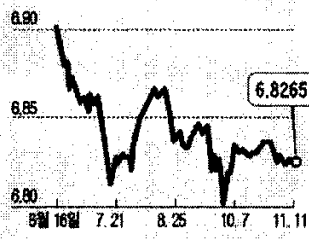
## '위안화 절하' 카드 왜

경기부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중국이 '환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경기부양을 위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로 여겨져 왔던 분야.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저우 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중안은행) 행장의 발언은 곧 이 카드를 던질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저우 행장의 발언은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 쓰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쓰러져가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탈출구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품에 제공하는 부가세 환급 범위를 대폭 확대했었다.

중국인민은행은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주로 재정정책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9월 발표된 6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역시 재정자금의 방출을 통해 이룬 것이었다. 저우 행장의

위안화 환율 추이  
단위: 달러당 위안



## 수출 기업에 탈출구 마련

##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숨통

이날 발언은 앞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도 기꺼이 활용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미 9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고, 또 상업은행의 대출제한도 해제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으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평가절하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중국 당국의 구상으로 해석된다.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할

경우 우선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곧 중국에 대해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을 가해 왔었다. 일각에서는 위안화 평가절하가 새로 등장할 오바마 행정부의 보호무역 분위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미국이 더 이상 평가절하 압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국 당국의 판단이다.

위안화 평가절하가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다. 우선 평가절하로 중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역시 활로가 트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약 80%가 수출가공품을 위한 중간재(부품 반제품)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대중국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에 밀려 우리나라의 수출이 타격을 받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우덕 기자  
woodyhan@joongang.co.kr

# 英, 30조원 규모 대대적 감세 추진

영국 정부가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대대적인 감세(減稅)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기업과 가계에 총 150억 파운드(30조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꺼져가는 투자와 소비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고든 브라운(Brown) 영국 총리는 10일 GMTV방송이 마련한 시민과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몇 달 내에 식료품, 연료가격, 주택대출 원리금 부담액, 전기·가스요금 등이 일제히 내려갈 것"이라면서 대대적인 감세를 예고했다.

그는 "내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일은 세계 각국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가 다시 순항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감세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영국 신문들은 영국 정부가 내주에 150억 파운드(30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의 감세안에는 모든 소비제품에 부가되는 부가세율(현재 17.5%) 인하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세 인하는 소비재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 이 같은 감세정책은 가구당 연간 수백 파운드(1파운드=2100원)씩의 소득 증대 효과를 낳아 소비 여력을 높여줄 전망이다.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5%, 2분기 대비)로 추락하고, 내년 성장률도 -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 양상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란은행은 지난주 주택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1.5%나 내린 바 있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 재정(공공지출), 조세(감세)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파리=김홍수 특파원

hongsu@chosun.com

## IMF, 파키스탄에 75억달러 구제금융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75억달러 규모 구제금융을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파키스탄 일간 더 뉴스가 11일 보도했다.

더 뉴스에 따르면 파키스탄 재무부 고위 관리의 "IMF가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파키스탄 관련 구

제금융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제금융안에 따르면 IMF는 앞으로 2년간 파키스탄에 대기성차관(SBA) 75억달러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연 6~6.5% 금리가 적용되는 13억달러 규모 특별인출권(SDR)도

포함된다.

이 같은 조건이 확정되면 파키스탄은 향후 75억달러 원금 외에 4억5000만~5억달러가량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는 "IMF가 구제금융 상환 기간과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상환 방식은 30억~40억달러를 먼저 갚고 나머지를 분기별로 나눠 상환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재현 기자

경기 좋을때 손실대비하는 스페인 지준을제

## G7 국가들 도입 검토

### 금융위기 재발 방지위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를 맞아 스페인이 채택한 예약할부제(lay-away) 방식의 외환관리시스템이 빛을 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영국 중앙은행의 제안에 따라 선진7개국(G7) 중앙은행과 재무장관 등이 '금융안정화포럼(FSF)'을 만들어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스페인의 자금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의 자금준비금 제도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경기가 좋을수록 손실에 대비한 준비금을 늘리는 방식이다.

경기가 좋을 때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늘려두면, 불황이 닥쳐도 은행들은 이 자금으로 대출 손실을 매울 수 있으며,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새로운 자금 확보에 나설 필요가 줄어들게 된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지난 2000년부터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준비금을 국제기준보다 더 확대하도록 했다.

/강동호기자eastern@sed.co.kr

# 버냉키-폴슨은 찰떡궁합? 천만에!

금융위기 해법 놓고 겉으로 일치된 행동, 뒤에선 자주 논쟁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 9월 17일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에게 전화를 했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는 파산했으며 미국 정부가 AIG에 구제금융 투입을 결정했음에도 증시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 평소 떨리는 음성으로 대화했던 버냉키의 목소리는 무뎠다. 버냉키는 폴슨에게 의회에 가서 광범위한 구제금융에 대한 승인을 얻을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를 꺼려하던 폴슨은 당장 답을 주지 않았다. 폴슨은 다음날 아침에야 버냉키에게 전화를 걸어 의회에 가서 공적자금을 요청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자에서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전후해 폴슨과 버냉키가 금융위기 대응에서 겉으로는 일치된 행동을 보였음에도 뒤에서는 리먼의 운명과 구제금융 방안 등을 놓고 종종 논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각자의 권한에 대한 한계 탓에 서로가 더 나서도록 몰아세웠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WSJ는 이들의 견해 차이는 위



버냉키

폴슨

기에 대한 정부의 접근법을 규정하는 데 기여하기는 했으나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었던 시기에 한동안 혼란과 비난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와 FRB는 리먼브러더스의 몰락 이전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도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폴슨은 리먼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살리는 것에는 선을 긋고 시장에서 해법이 찾아지기를 원했으나 티머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한 일부 FRB 관계자들은 폴슨의 입장이 타당하지 않았다.

FRB 관계자들은 폴슨이 리먼을 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3월에 몰락 위기에 처한 베어스턴스를 JP모건체이스가 인수할 때처럼 리먼도 임자가 나타나면 FRB가 지원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폴슨은 리먼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 때문에 은행들은 리먼 구제에 부담을 느꼈고 결국 리먼은 파산보호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리먼 몰락 이후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차는 있었다.

의회에 신속히 요청할 것을 원한 버냉키와는 달리 폴슨은 의회가 구제안을 거부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폴슨은 결국 의회에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내용의 구제금융법안을 들고 갔다.

버냉키는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것도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일본과 스웨덴의 사례처럼 재무부가 은행에 자본을 직접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했다.

폴슨도 내부적으로는 자본 투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의회 청문회 등 공개석상에서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자본 투입을 통해 금융회사 지분을 인수하면 민간투자자들이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를 꺼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조현정 기자

신경무

朝鮮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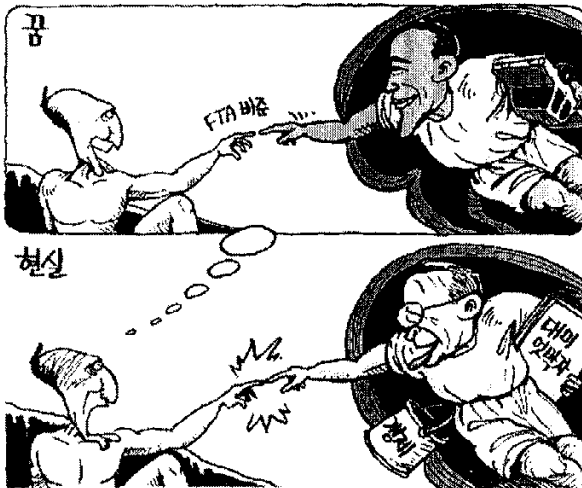
kmshin@choeun.com



김용민의 그림마당  
yongmin@kyunghyang.com



한겨레  
그림핀



장봉근  
jang@hani.co.kr

서울만평

백무현 bmh@seoul.co.kr



# 잊혀진 '재산세 환급 법안'

黨·政, 올해 급등하자 개정안 제출... 국회선 4개월째 논의도 안해

“지키지 못할 약속 왜 했나” 비판

## 우리은행 '파워인컴펀드' 손실액 50% 배상 결정

금감원 “투자위험 제대로 안 알려” ... 소송 잇따를 듯

美 2위 가전유통업체 파산... 1위 車업체 GM 휘청

## 실물위기 현실로... 한국도 후폭풍

삼성-LG전자 등 납품업체 피해 우려

GM대우차 내달 가동 일시중단 검토

맹형규 수석-원혜영 대표비공개 회동

FTA 비준안-예산 논의

美日,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수정 착수

오바마 “車업계 긴급지원 필요”

부 시 “FTA통과 협조해주면...”

대선 이후 첫 백악관 회동